

## 참고문헌

- 권 커크와 마고 오카자와-레이, '세계화, 군사주의 그리고 9. 11'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국제회의 자료집 (2002)
- 김성곤, 영화로 보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의미, 살림 (2003)
- 김우창외,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풀빛 (1999)
- 김엘리, '군사주의, 여성, 탈군사화를 위해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국제회의 자료집(2002)
- 오명호, 현대정치학방법론: 이론과 주요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박영사 (1995)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3)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 황영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보는 안보와 평화의 문제',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 논문집 (2003)
- ,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국제정치논총 제43집1호 (2003)
- , '심청전읽기로 본 한국 근대국가와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4호 (2001)
- , '밀키스, 최지우 그리고 4.13총선에서의 여성',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1호 (2000)
- , '한국여성이 IMF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IMF 극복전략의 성차별성과 그 구조화', 담론 201 제3집3호 (2000)
- , '영화 <해피엔드>, 정치 그리고 여성'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 11주년 기념 제30회 여성정치 대토론회 자료집 (2000)
- 조선일보
- 씨네 21
- Daum 쇼평
- Allison, Juliann Emmons, 'Peace among Friends: A Feminist Interpretation of

- the "Democratic Peace", Peace & Change, 제26집2호 (2001)
- Bernstein, Barton J., 'Understanding Decisionmaking U.S. Foreign Policy,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제25집1호 (2000)
- Bilgin, Pinar, 'Theory/Practices in Critical Approaches to Security: A Opening for Dialogue?', International Politics 제38집 (2001)
- Blight, James G. and Janet M. Lang, 'Burden of Nuclear Responsibility: Reflections on the Critical oral History of the Cuban Missile Crisi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제1집3호 (1995)
- Blight, James G., Joseph S. Nye Jr., and David A. Welch, 'The Cuban Missile Crisis Revisited' Foreign Affairs 제66집1호 (1987)
- Carter, April, 'Should Women be Soldiers Or Pacifist?' in Lois Ann Lorentzen and Jennifer Trupin(eds.), Women and War Reader, New York Univ. Press(1998)
- Cornwell, Rachell and Andrew Wells, 'Deploying Insecurity', Peace Review 제11집3호 (1999)
- Divine, Robert A., 'Alive and Well: The Continuing Cuban Missile Crisis Controversy', Diplomatic History 제18집4호 (1994)
- Enole, Cynthia,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Univ. of California Press (2000)
- ,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1990)
- Fahey, Josep J., 'The Task ahead for Peace Studies', Peace Review 제14집1호 (2002)
- Forecey, Linda Rennie, 'Women as Peacemakers: Contested Terrain for Feminist Peace Studies', Peace & Change, 제16집4호 (1991)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정대화·임성호·김승채·이재봉 옮김), 들녘 (2000)
- Goldstein, Joshua. S., International Relations(국제관계의 이해, 김연각·김진국·백창재 옮김), 인간사랑 (2002)
- Hofstede, Geert Hofstede,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 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간 협력과 세계속에서의 생존, 차재호·나은영 역), 학지사 (1995)
- Jones, Richard Wyn, Security, Strategy, and Critical Theory, Lynne Rinner (1999)
- McKeown, Timothy J., 'Plans and Routines, Bureaucratic Bargaining,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Journal of Politics 제63집4호 (2001)
- McNamara, Kathleen R., 'Whose Security?: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제46집 2호 (1993)
- Peterson, V. Spike, 'Subjectivity, Security and Sovereignty: Making Connection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1996년)
- , 'Transgressing Boundaries: Theories of Knowledge,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제21집2호 (1992)
- Pettman, Jan Jindy, Worlding Women, Routledge (1996)
- Pious, Richard M.,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Limits of Crisis Managemen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제116집1호 (2001)
- Rosati, Jerel A., 'Ignoring the Essence of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제3집1호 (2001)
- Runyan, Anne Sisson, 'Still not "at Home" in IR: Feminist World Politics Ten Years Later', International Politics 제39집 (2002)
- Scherer, John L., 'Reinterpreting Soviet Behavior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World Affairs 제144집 2호 (1981)
- Steans, Jill,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y Press (1998)
- Terrif, Terry, Stuart Croft, Lucy James and Patrick M. Morgan, Security Studies Today, Polity Press (1999)
- Tickner, J. Ann, Gendering World Politics: Issues and Approaches in the Post-Cold War Era, Columbia Univ. Press (2001)
- ,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여성과 국제정치, 황영주의 옮김), 부산외대 출판부 (2001)
- , 'Searching for the Princess?: Femin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제21집 (1999)

- , 'You Just Don't Understand: Trobuled Engagement between Feminists and IR Theori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제41집4호 (1997)
- Waalkes, Scott, 'Using Film Clips as Cases to Teach the Rise and "Decline" of the State',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제4집 2호 (2003)
- White Mark J., 'New Scholarship on the Cuban Missile Crisis', Diplomatic History 제26집1호 (2002)
- Woebrle, Lynne M., 'Silent or Silenced?', in Lorentzen and Jennifer Trupin(eds.)

## 군사주의 문화와 남성/여성상<sup>1)</sup>

권인숙 명지대 교양학부

### 탈군사주의 시대는 왔는가?

지난 수십년 자각조차 쉽지 않았던 군사주의와 그 문화적 여파에 비교하면 최근 몇 년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50년 전쟁을 겪고, 1961년 군사쿠데타를 겪은 이후 거의 처음으로 탈군사적 징후가 대중화되고 관심을 끄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유일하게 허락받던 병역의무의 신성화라는 공론도 처음으로 도전받아서 양심적 병역기피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고 모병제에 대한 논의도 일부에서 진행 중이다. 베트남 전에서의 한국인의 베트남인들에 대한 인권유린문제 또한 이야기되고 있다. 중학생 장갑차 살해 사건과 이라크전등을 계기로 반미와 반전의식이 합치점을 만나면서 광범위하게 퍼졌고, 남북정상회담이후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식도 많이 순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탈 군사적 징후에 대해서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대통령도 자식 병역기피는 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즉 병역의무가 시민적 의무와 권리 또는 지도자적 자질 검토, 부성적 역할 수행, 계층적 위화감의 완화정도를 측정하는데 차지하는 의미가 더 커지면서 병역의 역할과 위상이 더 공고해지는 면도 있다. 군사산점논쟁이나 이후 월장논쟁등은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1) 본 원고는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중심적 군사주의 문화의 깊이와 강도를 실감하게 하기도 했다. 반미의식은 제대로 부양되지 못하면 민족주의의 성장을 계속 부채질 하는 효과를 지닌다. 군사주의 문화의 극복이, 집단주의 의식이나 민족주의 의식에 대한 적당한 거리두기 없이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탈군사적 징후로만 읽기 힘든 면을 보인다. 또한 이라크 이후 관심이 집중되는 군사분규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써 군사주의적 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언제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탈군사적 징후들은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속에 늘 있다. 이런 혼란된 징후들을 대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군사주의 문화는 단순히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대적의식이 고양되었는가, 아니면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 주의를 돌리고 있는가 만으로 평가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전 사회가 국가방위와 경제개발을 목표로 총동원되어서 조직되었던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이다. 이 역사성과 의식되지 않았던 동조나 자발성은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무의식적이고 상식화된 많은 담론들과 가치, 그리고 다원화된 문화로 군사주의가 내려와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성별적 관점에서는 남성상과 여성상이 정립되고 유지변화하면서 성별화된 역할수행을 하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행사해 왔음도 동시에 의미한다. 우리정서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개발우선주의, 국가안보주의적 패러다임, 집단주의, 민족주의적 질서가 군사적 긴장감과 광범위한 동원력속에서 뿌리내렸던 지난 오랜기간의 군사주의 문화의 실체는 역사적 관점을 잃지 않으면서 섬세하게 구체적인 일상성 속에서 다시 되짚어 내야하는 규명의 어려움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와는 어떤 연관관계를 맺었고, 한국사회에서 남자로, 여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규정력을 갖는 기준이 되는지는 다양한 차원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의 글은 그 한 시론적 의미를 지닌다.

##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개념규정

군사주의 문화는 좀 낯설은 용어다. 대중적으로 가장 알려진 것은 군사문화이고 일부에서는 군대문화를 쓰기도 한다. 군대와 군사를 비교하면 군대는 군대조직이나

군인, 무기 이런 보다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면 군사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군대·군비(軍備)·전쟁 따위에 관한 일과 군무(軍務)에 관한 일 모두를 포함한다 (국어사전 참조). 홍두승(1996)이나 변화숙(1995), 조성숙(1997)은 모두 군사문화와 군대문화를 구별한다. 이들 연구자들은 군대문화는 군대내에서 형성된 문화를 일컫는다면, 군사문화는 군대문화가 사회적 영역에 이식되며 생성된 문화라고 설명한다. 홍두승과 변화숙은 군사문화를 시민영역에 형성된 하위문화라고 본다. 홍두승은 군대문화는 단순성, 획일성, 효율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보면서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속에서 군대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비판하면서 군사문화에 대한 비판을 군대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996:223, 224). 군대문화와 군사문화를 구분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구분은 군대와 사회영역이라는 전통적인 영역구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개념화는 군대가 사회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일방향의 영향력만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방향의 이분법은 시민 영역의 문화와 이데올로기, 정책들이 어떻게 군대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군대라는 조직을 유지, 지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없다. 특히 요즘같이 이완된 신세대의 가치와 민주화의 여파가 군대내의 병영생활의 변화를 낳는다는 군대문화의 역류현상이 많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더 적절치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의 경우는 군기문란의 한 원인으로 군대의 일반사회화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경향신문, 2003, 7.3). 즉 사회적 가치의 군대내화라는 역전현상이 한동안 군대문화를 이야기하는 분석의 도구가 될 듯하다. 또한 군대문화와 군사문화를 나누는 이 구분법에서는 홍두승이 주장하듯이 군대문화는 병영생활만을 일컫으면서 많은 경우 군대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는 가치 중립적인 시각을 요구받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개념은 군대나 군인의 영향을 떠나서 전사회가 병영국가로 조직되어왔던 오랜 경험을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국가안보가 경제개발이나 애국의 핵심논리로 오랫동안 기능했던 국가이다. 징병제도도 그 존재의 의의에 도전받지 않고 50여년간 있어왔다. 군사주의적 제반의 영향력에 국민들의 동의가 의식되지 않을 만큼 당연시 되어왔다. 이런 전사회적인 군사화의 문화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군대경험의 사회화, 일상화 이상의 개념이 필요하다. 군사주의 문화는 전사회가 군사화의 필요성을 의심없이 공감하고, 군사주의적 도그마들을 내면화했던 역사



를 살피는 데는 더 적절하게 기능한다. 군사주의 문화에는 군대문화나 군사문화에 국가방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추가된다. 즉 군사주의 문화의 확산이나 뿌리내린 정도는 국가 안보 개념의 중요성의 인식 정도(신성한 국방의 의무), 집단주의, 민족주의의 심화정도, 군인경험의 일반화정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역량의 재생산구조로서의 가족과 학교의 기능정도, 사회의 지향적 남성성과 용감한 군인상의 연결고리의 강도, 국가안보에 관련된 여성의 역할과 그 가시성, 군대적 조직관에 기초한 지도자 상이나 상하관계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등을 통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 군사주의와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관관계

신디아 인로는 전투를 잘 수행하기 위한 남성상은 많은 사회에서 기본 남성상의 근간이 된다고 주장했다. 육체적 강건함, 임무 완수를 다하는 책임감,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애국심, 동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동지에, 명령에 복종하고 위계질서에 잘 적응하는 순응성,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남성으로서의 소명감등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남성적 기질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상적인 남성상은 단일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가 씩씩하고 건장하고 소위 남자다운 남자형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질 좋은 사병을 소유해야 하는 사회적 의지와 상관관계는 작지 않다. 최근 박카스라는 음료의 선전에서 시력이 면제 대상으로 나쁜 예비지원병이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어떻게라도 지원 합격판정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누구라도 안갈 수 있다면 안 가고 싶은 개인담론과는 달리 한 국가나 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남성성에 대한 기준과 희망이 담겨있는 광고라고 보여진다. 이 광고의 청년은 씩씩하고 젊은이다운 순진함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박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가 사회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은 하려는 속 깊은 데가 있는 청년임이 바로 전달된다. 이 청년의 행동은 적어도 우리사회에서는 도덕적 우위에 서있다. 가수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획득후 병무청의 입국 불허 처리와 이어지는 논란, 최

근 인권위원회의 입국 불허처리에 대한 지지 처리는 박카스 광고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 희생하지 않은 공인의 모습을 얼마나 공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런 광고나 국가를 위한 자기 희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발전된 도덕적 가치만이 아니더라도 어린 남자아이를 좋은 사병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적 큰 책임이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성원들의 교육관이나 전사회가 학교나 방송매체등을 통해서 펼치는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는 이데올로기 없이 군인으로서 적합하다고 믿어지는 일률적 질의 남성들이 만들어지기는 힘들다. 또한 군사주의가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자리한 사회에서는 남성성, 여성성의 제조수준이 남성들의 좋은 군인 만들기, 여성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나 애인 아내로서의 가부장적인 규범내의 보조적이면서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성원으로 역할규정에 머물지 않는다. 남녀 모두에게 개인보다는 국가나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게 도덕적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정보의 제공과 판단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들 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외적으로 보이는 역할은 다를 지 몰라도 국가를 위한 희생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면서 총동원된다. 우리의 경우도 70년대에 주류를 이루고 80년대까지 이어졌던 병영국가적 개발 지상주의하에서 남녀 공히 많은 역할을 감당해 내었다. 이 부분의 의미는 뒤에 살펴보겠다.

## 다른 나라의 예

사회를 군사화 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오랜 시기에 걸쳐서 여러 변화를 보이면서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한다. 특히 전쟁이나 위기상황을 겪으면 그런 상호관련성의 실체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여러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시기시기 눈에 쉽게 띄는 이상적 남성상과 여성상의 실체를 보이고, 변화를 보였던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의 80년대는 람보의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시기였다. 포로수용소에서 돌아온 람보가 참전용사를 무시하는 미국내부시스템에 반발하는 1편부터 베트남으로 보이는 한 적성국가의 수용소로 들어가 아직도 잡혀있



는 동지들을 구해내는 2편등의 영화에서 활약한다. 람보의 무거운 대형무기를 양 어깨에 걸치고 권총 쏘듯 쏘아대는 괴력과 독심은 미국의 베트남전에 대한 무시와 상처를 일깨우고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자극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Susan Jeffords는 80년대 미국문화를 분석하면서 80년대를 70년대에 잃어버린 미국의 남성성을 되찾으려는 시기로 분석했고 람보를 그 중요한 상징으로 지적했다. 베트남전의 패배, 70년 대 말 '이란 인질 사건'의 악몽을 잊고, 레이건을 중심으로 다시 소련과 대적하는 힘의 정치를 펴고, 라틴아메리카의 공산화되려는 여러나라에 정치공작과, 군사개입을 강행했던 80년대는 새로운 상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시기에 람보 뿐만이 아니라 아놀드 슈왈츠네거까지 동반한 과도한 근육질의 기질적으로는 우직하지만 문제 해결능력이 육체적으로 뛰어난 남성이 이상적인 남성형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당시 미국 남자아이들에게 세대를 넘어서 가장 인기있는 인형인 GI Jo 라는 사병인형의 모습도 같이 변했다. 이전의 보통의 건장한 정도의 몸매를 가진 사병형에서 상체가 최소한 2배이상 부풀려진 근육질형의 모습으로 바뀐것이다. 노골적으로 강한 근육질의 비겁하지 않는 남성성과 국력간의 등치관계를 사회문화속에서 드러낸 경우이다. 80년대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70년대에 타올랐던 여성운동이 거센 반발로 뒷걸음치는 시기로 기억낸다. 정치적, 문화적 보수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여성의 몸은 체인 폰다가 주창한 운동하는 근육질의 여성상도 있었지만, 사실 이 시도는 다이어트와 심하게는 거식증으로 죽어가는 본인과 동시대 여성을 구하려는 의지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다. 80년대 이후는 오히려 size 0를 추구하는 거식증 형의 바삭마른 소녀스타일의 몸이 이상형으로 등장하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

80년대 뿐만이 아니다. 이차 세계 대전중, 떠나가는 부두에서 손을 흔들고, 애인과 남편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을 대표했던 여성이 한 일은 그런 여성상과는 상치되는 일이었다. 부족한 노동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공장이나 여타 기존의 남성들이 하던 일을 맡으면서 기존의 여성성을 무너트리는 역할 수행을 훌륭하게 하고 여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상을 바꾸어 나간다. 그러나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돌아온 남성들에 일자리를 다 돌려주고, 여자들은 아이를 다산하고 허리가 잘록하게 드러난 옷을 입으며 미국에서 가장 여성들이 여성스러웠던 시기를 맞는다. 그런 여성성이 도전받는 것은 60년대의 반전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속에서 본격적으로 커져나온 여성운동에 의해서였다. 히피로 대변되기도 하는 이시기는 기

존의 꾸민외모, 교차점이 별로 없이 대별되던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하게 드러내던 기존의 양극화된 성별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한 시기였다. 위의 미국의 예는 군사주의 문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 남성상 여성상은 군사주의적 질서를 잡아가려는 중요한 기반이며 강화하고 약화하는 고리나 수단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의 상호관계는 한시기만을 끊어서 이해할 경우 그 역사성을 잃어 내기 힘든 한계를 지니게 된다. 60년말, 70년대초의 강한 반전운동이나 진보적인 평화운동은 미국인의 손상된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상실감을 대체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collective memory 싸움에서 진보진영이 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미국인들은 이때를 악몽과 혼돈스러웠던 시기로만 주로 기억한다 (고등학교까지는 베트남전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80년대 이후의 강한 미국에 대한 탐욕적인 추구하고 정치적 보수주의, 그와 함께 나타났던 재 남성화는 60, 70년대에 대한 이해와 평가없이 이야기하기 힘들다.

미국의 예에서도 보이지만 군사주의 문화와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립은 단선적이지 않다. 그것은 가부장제와 민족주의와 밀접하게 연결을 맺으면서 정립되고 유지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흥미있다. 베트남은 전쟁당시 백만명 이상의 준 군사적 역할을 한 여성들의 (militia women) 존재로 유명한 사회이다. 한쪽 팔에 아이를 안고 다른 팔에 총을 진 여성사진이 광범위하게 이들 준군사적 역할을 하는 베트남 여성을 상징하면서 세계로 퍼졌고 강인한 베트남여성의 이미지를 남겼다. 90년 초와 중반을 걸쳐 베트남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한 터너의 연구는 병사로서의 역할이 이후 사회적 발언권이나 시민권의 강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 그 연결고리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어서 관심을 끈다. 남성화된 여성, 보다 개방되거나 자기권익에 민감하거나 적어도 남녀동등권에 대한 권리의식과 당당함을 지녔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본 이들 여성은 무척 달랐다.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라고 관대하게 용서하는 체스처를 취했다. 반면 저자가 이혼했다는 사실에는 자식을 생각 안하는 이기적인 여자라며 미국여자 일반을 같이 몰아서 몹시 화내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전쟁에 참여하느라 혼기를 놓쳐버린 이 여성 참전용사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혼외정사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모습도 터너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터너는 이 의미함과 문화적 차이에 의한 혼란을 적어놓는데서 끝나지만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흔히 전쟁이 후 성역할이나 성문화는 많은 사회에서 더 보수화 된다. 우리 역사속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가 그 전형이다. 무너진 사회기강을 잡는다며 성별적, 장자 중심적 유교질서를 더 강하게 세운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여성의 재산상속, 봉제사가 가능했던 조선초보다 훨씬 낮아지고, 정절이나 재혼금지 등의 법이나 풍습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의 2차 대전이후 여성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병사역할이 끝난 남성들에 평상시 역할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는데 가장 쉽고 먼저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성문화나 남녀간의 성역할이다. 전쟁을 통해서 박탈당한 것을 보상받으려는 사회집단적 욕구와 연결되기도 하여 대부분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복귀나 강화는 무너진 위계질서를 빠르게 찾아가는 문화적 도구가 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가부장제는 프랑스와의 전쟁, 이어지는 미국전쟁에 의해서 잃어버린 평온한 삶 함께 하는 가족들의 삶을 의미하면서 베트남인들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의 핵심을 의미했다. 여성성, 아름다운 것, 집에서 살림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그동안 가지거나 하고 싶어도 갖거나 할 수 없었던 박탈당한 것, 그렇기에 더욱더 찾고 싶은 가치있는 것으로 대중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혼을 쉽게 하는 미국여성을 보면서 자기 복을 모르고 설치는 여자들,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임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준의 일임을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할 만큼 극단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낮은 수준의 자기 기대감도 두드러진다. 특히 강한 민족주의, 집단주의, 늘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어머니의 역할 모델이 강조되었던 사회에서는 여성의 자기 중심성이 이해되거나 건강한 모습으로 서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사회심리적 면이 있지만 아들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유교적 사회유산만으로 분석하기 힘들다. 그나마 바닥난 사회적 자산과 직업기회에서 가부장적 삶이 정상적 삶의 회복으로 여겨지는 사회심리가 받쳐지면서 대부분 안정적 직업은 주로 남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사회복지를 제공할 아무리 사회적 자산이 없는 나라에서 아들이 있다는 것은 노후의 생활이 어느정도는 보장이 됐음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와 부모를 모시는 문화속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들을 낳으면서 마련되어진다. 아무런 생산능력이 없고, 연금혜택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에게 아들낳기는 노년의 삶을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다. 물론 결혼하기 못한 여성참전용사들이 미혼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전의 미혼모자식에 대한 차별을 국가 스스로 법제 변화를 통해서 바꾸기도 한다. 그만큼 사회여론이 이들 여성참전

용사들의 삶에 우호적이고 책임지지 못함을 안타까워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의 발언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이 전쟁에서의 자기를 희생하는 제 일의 시민모델인 전사역할을 평등하게 나눈다 하더라도, 가부장 질서와 민족주의적 저항속에서 만들어진 여성성, 남성성의 맥락이 쉽게 파괴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 전사와 시민권

제일의 시민모델인 전사역할은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고 작은 게릴라 투쟁에 참가한 여성들의 투쟁이나 헌신이 그 사회에서의 발언권이나 시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끝나지는 않아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시민권은 국방의 의무와 직결된다. 특히 남성만의 의무로 여겨질때의 그 상관관계는 아주 높다. 이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는 이전의 종교적인 힘이나 왕권의 힘 대신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 충성심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Hobsbawm, 1990:85). 이 의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전사이다. 많은 나라와 문화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병사는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의 기본모델로 존재한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죽은 병사가 영웅적 상징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 민족주의와 관련된 현대문화중, 무명병사의 무덤이나 기념비보다 더 강한 흡인력을 갖는 상징은 없다" (Anderson, 1991) 고 했다. 질 스티즈는 영웅전사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가부장적 민족국가를 세우는 데 결정적임을 지적했다(Stears, 1998). 이러한 병사의 자기희생은 남성을 모델로 한다. 따라서 민족을 위한 제일의 희생으로 취급되는 이들 전사적 희생은 군대내나 군대 밖에서 그 사회의 군사화된 남성성을 부양한다. 한국에서는 징집제도를 통해서 남자의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이 일반적 상식으로 자리잡혀 왔고 남성성의 기준이 되는 경험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측면은 군 가산점 제도와 더불어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의 위치를 더욱 공고화하는 특권으로 분석될 수 있다. 남성을 위한 제 2차 학교로서 이 징병제도는 그 효율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아 왔다. 군대의 2차 교육



기관적 의미는 최근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청소년 극기훈련이 바로 군대식으로 운영되거나 군대를 방문하여서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명예로운 제대는 십대의 방황과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을 끝내고, 조직화된 시민사회속에서 협조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있는 남성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서 같은 역할을 한다. 박 노자는 한국남성들이 모임의 첫자리에서 첫 질문으로 군대갔다 왔냐라고 묻는 것을 보면서 군대필 여부가 한 남성을 이해하는 최선의 정보로 자리잡혀있는 현실에 놀랐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노자, 2000). 조성숙은 군대에 갈 시기까지 겪는 남자로서 태어난 것에 대한 반복적인 회의와, 폭력적인 훈련과 어려움은 겪으면서 갖는 고통은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성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질정에 이룬다고 분석하다. (조성숙, 1997). 오히려 부유층의 병역기피는 계층적 특권이 군대가 보장하는 남성성을 극복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군대내 사병간 성폭력 또는 장교가 사병에게 저지르는 성폭력은 2차교육기관으로서의 환상이 깨지는 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군대내의 환상이 깨지던 깨지지 않던 간에, 이제까지 군대의 경험은 우리나라 남성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중의 도드라지는 부분의 하나는 남성들만이 나누는 male bonding, 강한 동류 의식이다. 군가산점 제도의 논쟁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지만 남성들의 폭발적이고 격렬한 감정적 반응은 일단은 군대에서 자기가 한 희생을 사회가 부정하는 듯한 데서 오는 감정적 반발감 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적 해당사항은 없지만 자신과 함께 고생했던 동료 또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군대라는 공간을 경험한, 그리고 경험할 동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남성적 연대감에서 오는 분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의 한 특성인 강한 남성적 동류의식의 한 근거를 군대경험이 획득한 연대감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성문화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남성들의 집단문화와 언어 그리고 공감대 형성에 군대 갔다는 경험이 큰 역할을 함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만의 집단적 군대경험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조직화 되었으며 성별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별로 의미파악이 되거나 언술화 되어 오지 못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이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오지 못했다. 그중의 한 이유는 물론 여자는 자원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접적 군대경험을 하지

않은 다는 것이다. 권오분이 군대경험이 남녀공학대학에서 의미화 되는 과정을 분석한 글을 보면 군대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여학생들에게 했을 때 반응은 '군대경험은 갔다는 남자들에게 물어야지' 혹은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이지 여자들은 상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풀어가다보면 어느 정도 여성적인 시각에서 볼 것을 기대했던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남성들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인양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권오분 2000: 33). 권오분의 연구는 여성들이 타자로서 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동조자로서 포섭되면서 군사화되고 남성화된 문화와 언어의 영향권에서 살아온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런 타자화된 경험은 국가안보를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을 해온 여성들에게도 해당된다. 미군주둔을 위해 성매매를 해온 백만명을 웃도는 미군기지 매춘여성들이나 7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외화획득이라는 기치아래 성행했던 기생관광에 나섰던 매춘여성들, 산업역군의 큰 몫을 담당했던 여성노동자들도 희생해왔다. 직업장교 부인들의 군대조직 유지를 위한 무임노동도 그렇다. 이들 부인들의 협조없이는 늘 비상이나 빈번한 이동에 의해서 정상적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업군인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가부장적인 남녀간의 역할분담 때문에 이들 군인부인들의 군대리는 조직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제대로 가시화되거나 대가를 위한 요구가 조직되지 않지만 사실 이들도 군대조직의 한 성원이다. 그러나 직접 국가안보와 관련되어서 해온 이 여성들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과는 달리 희생자로서 사회적 인정을 얻지 못했고, 주류의 이상적 여성성을 대변하지도 못했었다. 매춘여성들은 일의 성격상, 여성노동자들은 계급, 계층적 한계와 결혼전까지 하는 한시적 노동력이라는 사회통념과 현실에 매여서 주류 여성상을 대변할 수 없었다. 군인부인들의 경우는 남편을 위한 아내들의 자기희생이 당연한 가부장적인 문화속에서 주류여성, 좋은 여성의 범주에 속하였지만, 군대주변 문화의 동떨어짐속에서 이순자, 김옥숙등 군인출신 대통령 부인들이 소위 장성급들 군인의 부인들은 이렇게 날친 다더라는 유언비어식의 부정적 이미지외에는 특별히 이상적 여성상에 근접해있지 않았다.



## 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타자화된 경험과 언술화되거나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여성의 희생은 주체와 보조주체라는 개념으로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 시민권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군사주의 사회에서 결국 여자는 보조 주체라는 개념과 성별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반대하는 가부장적 구속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 경제성장에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은 무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이어진 노동집약적 산업에 여성노동자들이 주역할을 해 왔고, 70년대 농촌생산성이나 생활변화의 주 역할을 한 새마을 운동은 대부분 농촌 지역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었다. 실제 군사주의적 국민동원은 남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기지 주변의 매춘여성이나 군인부인 또는 여성노동자나 새마을 운동의 여성뿐만 아니라, 70, 80년대 학도호국단등을 통한 여학생의 조직화도 있어왔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같이 나무총을 들고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타의 교육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군대와 같이 학생회장대신 연대장이 있었고, 대대, 소대등으로 조직해서 분열행사를 매주 하곤 했다. 70, 80년대 군사주의적 교육이념의 성별적 개념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여고생 간부훈련교육장이었던 신사임당 수련원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상복이 한복과 교련복이었고, 엄격하게 군대식으로 서열을 짜서 훈련하는 학생들을 조직했다. 강조되는 것은 애국과 효도, 이상적인 여성상은 신사임당같이 범절이 갖추어진 딸, 부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위기시에는 예비보조군인으로서 간호병 내지는 군대의 보조역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지는 것이었다. 군사주의화된 사회에서는 여성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참여의 한시성이다. 여성에게 평생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은 막으면서 한시성을 강조하며 기본 활동공간은 가정이라고 한정짓는다. 반면 국가주의적 논리가 동원되면서 온갖 사회적 노동에 일정한 자발성을 가지고 대가없이 동원한다. 결국 이 한시성과 보조성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여성이 사회노동에 참여해도 이상적인 여성상이나 보편적인 여성상을 대변하는 것은 주부가 된다. 이런 성별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통 전쟁등이나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는 IMF였다. 남편 기살리기 운동이나 실직한 아빠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등이 일간지등의 집중조명과 호응을 얻으

면서 꽤 광범위하게 일어났었다. 이 캠페인들은 한국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바뀌지 않은 전제들을 보여준다. 1) 남자만이 사회적 노동을 하는 가장이고, 여성은 주부이며 경제위기시에는 남자를 자살로 모는 집적인 존재이고 2)가장이 흔들리는 것은 곧 한국사회의 위기이며 3)한국경제 개발에 주역으로서 고생해온 가장에 대한 사회적 연민과 고마움이 뿌리깊다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는 극단적인 예가 1999년 민주노총에서 만든 포스터였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사원으로 보이는 남성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흐릿하게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가 뒤에 있으면서 당신만이 희망이라고 써져 있는 이 포스터는 이런 사회적 전제가 노동운동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 최성애는 여성의 역할은 과소비주체만으로 부각되었다고 이야기한다 (Soungai Ch'oi, 1998: 88). 실제 언론에서 대표되었던 이미지속에서 여성이 한국경제를 위해서 한 일은 사치스러운 여행과 분별력없는 소비를 통해서 외환부족 사태를 불러온 것만으로 묘사되었다. IMF 당시 김영삼 정권말고는 이들 여자들이 집단으로서는 유일하게 경제환란을 일으켰다고 지목되었었다.

IMF 이후 이어졌던 군가산점 제도나 월장 논란, 페니스 파시즘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여성혐오 또는 여성비하적 실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이었다. 즉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동등한 대접을 요구하는 주체로 나서려고 하는데 대한 군사주의 문화적 제재였다고 생각된다. 군사화의 강도가 세고 군사주의적 문화가 뿌리깊은 사회일수록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성의 존재는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을 누리려는 무임승차자 또는 남자가 목숨을 바쳐서 보호해야 하는 짐스러운 존재로까지의 비약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자들이 징병대상이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과, 징집면제혜택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 군대내에서의 역할보다는 장래의 병사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는 점 때문에 동등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주의적 사회에서 드러나는 여성차별적 현실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다. 군대를 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주의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의 전사적 역할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문화유지는 한 근간을 이룬다. 결국 징병제가 존재하고 물리적 국가방어가 염려와 그를 위한 희생이 당연시 되는 사회일수록, 집단주의적 전통이 강하고,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사회일수록,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립은 그 도구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된다. 문제의 극복은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 될수 있다. 성차별적 문화극복은 군사주의적 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매개이고, 민족주의나 집단주의에 대한 경계심, 징병제나 군대생활에 대한 보다 공개된 검토, (예로, 군대내 성폭행폭로는 남성의 군대경험을 중심으로 한 연대감에 어느정도 도전이 될듯하다), 여성의 눈으로 여성을 주체의 시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현대사의 해석까지 다양한 노력이 모두 탈군사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 권오분,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남녀공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노자,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2000).
-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공저,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1994).
- 이성찬,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 서울: 들녘 (1998).
- 장민서, 이 예하, 군대 바로 알고 가기, 서울: 정보나라 (1998).
- 장필화와 조형,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 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1).
- 정진성,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 군복무가산점제도의 쟁점과 실태에 관한 자료집(2000).
- 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7).
- Jeffords, Susan, The Remasculinization of America: Gender and the Vietnam War,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London and New York: Verso (1996).

- Ch'oi, Soung-ai, "Whose Honor, Whose Humiliation: Women, Men, and the Economic Crisis in South Korea", Southern African Feminist Review, vol.3 no.1(1998), 87-90.
- Enloe, Cynthia, Bananas Beaches &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The Morning After,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Maneuver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2000).
- Hobsbawm, E.J.,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Levy, Edna, Heroes and Helpmates: Militarism, Gender, and National Belonging in Israel, Doctoral Dissertation a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1998).
- Stans, Jill,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 Introduc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8).



# 미국 군사패권주의의 양상과 21세기 세계의 불안한 시작

Plick?

李 三 星 (翰林大 정치외교학과)

## 1. 미국 군사 패권주의의 초상

패권은 객관적 존재지만, 패권주의는 의지적 행동양식이다. 미국은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패권국가이지만, 패권적 위치에 다가오는 도전들에 군사주의로 공세적 대응을 전개하면서, 패권주의적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 패권국가가 패권주의적 행태로 일관할 때, 세계질서에서 사회적 정의와 국제적 평화에 대한 인류의 정치적/물질적 투자의 공간은 막히고 왜곡되며 그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불모지에서는 크고 작은 중오와 군사주의가 풍미하게 된다.

21세기의 첫 전쟁들인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은 미국 패권주의의 리얼한 초상들이다.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들과 달리 그것들은 왜 패권주의의 발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가. 9/11 이후 미국 대외정책이 보여주는 패권주의의 모습을 세가지 전쟁양상을 통해 바라본다.

### (1)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과 대리통치, 그리고 '전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허구

미국이 9/11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미국의 안전은 천문학적 규모의 군비투자와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우주의 군사화와 각종의 첨단무기들로 확보될 수 있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히 정치적인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해한 9/11의 교훈은 달랐다. 2002년 9월 조오지 부시는 그 교훈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약소국들도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커다란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sup>1)</sup>

미국이 대테러전쟁의 첫째 목표물로 삼은 아프가니스탄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라는 국제 반미테러조직의 근거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와 9/11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의 증거를 미국정부는 명확히 제시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들과 언론들은 9/11 이전부터 케냐 등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미국의 대사관이나 군함에 테러를 주도한 국제조직의 배후로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지목해왔던 터였다. 이들에게 근거지를 제공한 것은 분명해보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전쟁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미국내 진보적 지식인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반핵평화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인 리처드 포크(Richard Falk)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했다. 포크는 그것이 "지구종말적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a war against apocalyptic terrorism)"이라고 말했다. 그 시기 유엔의 한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이 초래할 혼란과 인도적 재난 속에서 약 10만명의 어린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하워드 진(Howard Zinn)의 말을 빌리면, "9/11 뉴욕테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고한 남녀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전쟁"으로<sup>2)</sup> 발전했다는 사실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9/11을 능가하는 가공할 테러행위와 반인류적 범죄를 내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는 이 전쟁의 범죄적

1) George Bus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www.whitehouse.gov.

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해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사회 안에서 진행된 논란에 대해서는, *The Nation*, "Is This Really a Just War?," November 26, 2001. 을 참조.



성격에 대하여 침묵했다. 9/11의 충격은 이후에 전개될 미국의 보복적 테러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한 양상을 띠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국제규범을 유린한 이 전쟁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sup>3)</sup>, 미국 안팎의 전통적인 반전평화운동 진영의 일부를 포함하여 세계여론의 상당부분이 이 전쟁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의 하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물론 부시행정부도 이 문제를 잘 활용했다. 부시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는 전쟁기간을 전후한 시기에 방송을 통해 탈레반정권하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고통에 대해 강조했다. 사람들은 탈레반정권에 의한 극악한 수준의 여성억압이 이 전쟁으로 종식되고 미국의 이른바 '정권교체' 전략으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남아시아의 이 척박한 땅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다. 그러나 「국제인권감시위원회」(Human Rights Watch)가 펴낸 「2003년도 국제인권감시위원회 보고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추진하는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전쟁으로 2001년 11월 말 탈레반정권은 붕괴했다. 그 다음달인 2001년 12월 독일 본에서 아프간 대표자들이 모여 권력공유의 틀에 합의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여 2004년까지는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에 서명했다. 그리고 「국제안보지원군」(ISAF)이라는 소규모의 국제평화유지군을 창설했다. 2001년 12월 22일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를 의장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6개월 후인 2002년 6월, 「본협정」에 따라, 비상의회인 「로야 지르가」(loya jirga[Grand Council])를 수도 카불에서 소집하고, 제2차 임시정부를 세웠다. 비상의회 의장인 카르자이를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임시정부하에서 2004년 총선거를 치러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은 대부분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각종 유엔기구들과 국제개발기구들이 이 나라에 지부를 열어 아프간 재건을 돕게 되었다. 또한 수년만에 처음으로 유엔이 인권감시요원과 그들을 보호할 요원들을 아프가니스탄 영토 안에 상주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6월에 구성된 로야 지르가 의원 1500명중에 여성은 160명의 의석을 보장받았다. 인원과 운영자금이 태부족이긴 하지만 여러 인권 및 시민사회조직들이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외관상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증거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탈레반정권을 대체하여 이 나라의 각 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한 군벌세력들에 의한 인권유린과 전범적 행위들이다. 2002년 내내 카르자이를 수반으로 임시정부의 권력이 미치는 것은 수도 카불에 제한되었고, 그 밖의 거의 모든 지역은 이들 군벌세력(warlords)이 장악했다.<sup>5)</sup> 2001년 전쟁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탈레반에 반대하는 모든 군벌세력과 연대하여 이들에게 돈과 무기와 군복과 위성통신장비들을 제공했다. 전쟁이후에도 미국은 이들 군벌들의 범죄적 행태들을 통제하는데 정치적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를 거부해왔다.

그 결과 아프간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인의 안전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방기했다고 「국제인권감시위원회」는 지적했다. 군벌세력은 비상의회 의원들의 선출과정에 직간접으로

3) 미국의 아프간전쟁은 전쟁개시 자체가 우선 국제법위반이었다. 미국은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엔헌장 51조가 정한 "자기방어의 권리"(the right of self-defence)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었다. 그러나 그 51조가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중인 또는 임박한 공격"(an attack that is ongoing or imminent)을 격퇴시킬 권리며, 그것도 임시적 조치로서 그러하다. 즉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인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유엔안보리는 두 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9/11 테러공격을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공표했다. 그 안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었다. 자기방어권리는 일단 공격이 중단되었으면 그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권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보복을 위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사하고 결정할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보복적 전쟁행위는 허가된 것이 아닌 것이다. Michael Mandel, "This War is Illegal," www.wagingpeace.org (Website of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October 12, 2001.

4)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3: Afghanistan."

5) 이스마일 칸(Ismail Khan), 무하마드 카림 칼릴리(Muhammad Karim Khalili), 라시드 도스툼(Rashid Dostum) 등이 대표적인 군벌들이다.



개입하여 민주적 의회구성을 왜곡해왔다. 나라 전체에 걸쳐 군벌과 지역군사령관들이 비상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들은 곳곳에서 민간인들에 대해 억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탈레반지도부와 같은 계열로 통하는 아프간 북부의 파쉬툰족(Pashtuns) 민간인에 대해서는 광범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파쉬툰족 부녀자와 소녀들에 대한 군부대의 집단 윤간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그 한 단면이다. 군벌의 하나인 라시드 도스툼이 지휘하는 군부대는 쿤두즈에서 마자르 에 샤리프로 탈레반 전쟁포로들을 수송하던 중 수백명을 살육했다. 군벌과 그 군부대들에 의한 민간인 인권유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유엔의 정식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탈레반정권의 반인도적 성격은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에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전후 아프가니스탄의 실상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한 군벌들은 탈레반 정권과 싸운 세력이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여성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탈레반시절의 종교경찰인 「악을 진압하고 덕을 장려하는 부」(Ministry for the Suppression of Vice and the Promotion of Virtue: "Vice and Virtue")는 사라졌다. 그리고 탈레반이 금했던 여성의 직장생활과 학교 다니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수도 카불 바깥에서는 아직도 수백만의 여성들이 정부조직이나 비정부조직에 의해서 차별과 괴롭힘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직장에 다닐수도, 교육을 받을 수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많은 지역에서 아프간 여성들은 그들의 행동과 의상, 표현, 이동의 자유를 탈레반시절의 극단적 근본주의 관행에 가까운 제재를 받고 있고, 어길 경우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예컨대 2002년 10월과 11월, 헤라트(Herat)라는 도시에서는 관계없는 남자들과 같이 걷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병원으로 강제연행되어 최근의 성적 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탈레반시대에 강요되어온 온 몸을 감싸는 부르가(burga)를 벗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2002년 11월 12일, 미국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자유지원법」(Afghanistan Freedom Support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아프간 재건을 위한 기금 증액을 허용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카불 이외의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 확대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며, 아프간에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그리고 법치(法治)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 행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6개월마다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아프간에서 미국이 애당초 탈레반 전복을 꾀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아프간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에 미국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인지, 세계는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많은 경우 국제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위반한 반인도적 파괴와 살상의 전쟁행위를 통해 탈레반을 전복하고 미국의 패권을 팽창시킨 것이 아프간의 민주주의와 여성을 포함한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선언이 얼마나 공허한 것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2003년 8월의 시점에서도 CNN의 한 보도는 수도 카불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확대파견해야 한다는 아프간사람들의 아우성이 여전히 여전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레반정권 붕괴가 선언하고도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4월 8일에도 미군 전투기의 폭격(미국은 '오폭'이라고 말한다)으로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의 한 마을에서 11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지난해 7월 1일에는 역시 미 공군기들이 여러 마을을 동시에 폭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48명이 죽고 117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중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 하객들이었다.<sup>6)</sup> 2003년 4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아직도 1만여명의 외국군대가 주둔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 탈레반 잔당과 알 카이다 색출 등이 그들의 주요임무이며, 그 대부분인 8천명이 미군이다. 이들의 작전 중에 미국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이 이정도이면 실상은 더 비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인권감시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프간의 보통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무렵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폭력과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다. 탈레반의 활동이

6) Todd Pitman, "11 Afghan Civilians Die in Bombing," *The Washington Post*, April 9, 2003.



채부상한 탓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탈레반을 붕괴시킨 후에 아프간을 관리할 세력으로 선택한 경찰, 군대, 정보기관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밤이 되면 경찰관들은 가택을 침입해 재산을 빼앗고 젊은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범죄자로 변신하고 있다. 많은 지방군벌들은 서로 수시로 전투를 벌이는 무정부적인 무력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보통사람들은 더욱 불안하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카불에는 일정한 질서를 구축할 시범지역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수도 카불에서조차 미국이 선택한 대리 통치세력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인을 협박하고 정치적 반대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권력자가 미국과 가장 가까운 인물인 국방장관 모하메드 파힘(Mohammed Fahim)이다.<sup>8)</sup>

## (2) 이라크: 인도적 위기와 패권상실의 위기, 그리고 전쟁의 선택

명분이 모순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서양동맹 안에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전면적인 군사행동에 나섰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또 거론되어 왔다. 석유문제는 그 중 한가지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서 석유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는가는 불분명한 얘기다. 석유 등 여러 가지 전략적 이해관계가 놓여있는 이라크와 그 주변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이 이 시점에서 정치외교적 접근이 아닌 전쟁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한 배경이 설명되어야 한다.

결프전 이후 미국은 유엔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경제제재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후세인정권은 그 억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대한 아랍세계의 민족주의적 항전의 전위로 정당화되는 효과까지 낳고 있었다. 반면에 그러한 국제사회의 경제 군사제재의 직접적인 실제 피해자는 이라크 국민이었다. 경제적 피해와 질병 등으로 인도적 재난 사태가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이라크에 대한 경제/군사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날로 증대시켜왔다.

1990년대 중반에 유엔이 발표한 한 평가에 따르면, 1991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 결과로 죽은 이라크인은 이미 160만명에 달했고, 그 피해자집단은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었다.<sup>9)</sup> 또 1990년대 말 유엔 관리들이 밝히기를, 유엔 경제제재조치로 매달 5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예방될 수 있을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sup>10)</sup> 1999년에는 미국 유력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은 “현대사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인명의 희생보다 훨씬 더 큰 인명피해가 서방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을 빌미로 이라크 등에 대해 강제한 경제제재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sup>11)</sup> 그리고 세계 곳곳의 평화운동 행사장에는 미국의 열화우라늄탄과 같은 반인도적 무기 사용과 유엔 경제제재의 결과로 이라크의 병원에서 기초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백혈병 등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라크의 어린 소년소녀들의 사진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특히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내에서 여러 주요 상임이사국들에 의해서도 논의가 제기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라크문제의 실체는 후세인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강요되어온 이라크의 봉쇄와 고립화가 초래한 인도적 재난사태였다. 물론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문제의 핵심이 여전히 후세인정권의 위협성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문제라고 강변해왔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에 대한 저강도전쟁을 간단없이 전개해왔다. 그러나 그 정책이 심화시키는 야만

7) John Sifton and Sam Zia-Zarifi, "The Lesson of Afghanistan: Peacekeeping in Iraq,"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20, 2003.

8) Sifton and Zia-Zarifi, 위의 기사.

9) Inter Press Service, "Iraq: Sorry about Civilian Casualties, the US Strikes Again," January 26, 1996. [www.oneworld.org](http://www.oneworld.org).

10) Inter Press Service, January 24, 1999.

11) John Mueller and Karl Mueller,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Foreign Affairs*, May/June 1999, pp.43-53. 이삼성, 『세계와 미국』 (한길사, 2001), 692-693면.



적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높아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풀고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사찰 등,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전망이 걸프전쟁이후 이라크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주도해온 미국과 영국에게 가장 두려운 사태였다는 사실이었다. 후세인정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라크가 유엔의 봉쇄와 제재를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경우, 중동의 질서는 미국과 영국이 직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위상을 회복한 이라크와 후세인정권이 중동에서 미국과 영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할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러한 가능성은 이미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시에 이라크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에게 석유개발에 있어서의 우선권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라크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초래할 반미적인 이라크의 정상국가화는 결국 중동 전반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이 뒷받침해온 정치군사경제적 패권의 급격한 몰락을 예비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라크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을 미국에 제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란문제였다. 반미적인 이라크가 중동에서 정상국가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웃한 이란의 정치사회 또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 역시 미국의 중동 패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었다. 이란은 1979년 친미 왕정체제를 무너뜨리는 반미적인 정치혁명을 통해 등장한 이후, 1980년대에는 이란혁명의 붕괴를 원하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침략을 받는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관심이 이라크 통제에 집중되는 사이, 이란의 정치와 사회는 세속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많은 문제점과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평화적으로 이라크와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들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한다면, 중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은 평화적으로 해체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그러한 사태를 원할 수 없었다. 9/11을 계기로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이 미국에게 다양한 군사행동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틈을 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까지도 감행한 것에는, 미국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들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중동 패권 유지전략이 철저하게 그 배경에 있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동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중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패권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점증하고 있었다. 9/11 사태는 대테러전쟁의 명분 하에 미국이 이라크문제를 군사적으로 접근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동에서 자신의 패권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전쟁'이라는 군사주의적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미국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평화를 강요하기 위해 전쟁을 선택한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부시행정부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9/11사태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억압과 미국의 방조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는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면서도,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낼 것인가 하는 해결방식의 문제였다.

우선 부시행정부는 팔레스타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국가의 등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점령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연한 전제였다. 조오지 부시는 2002년 5월 23일 독일 베를린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이 점을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은 민주적인 팔레스타인의 성공이 관건이다. 영구적인 점령상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있는 팔레스타인 국가(a viable, credible Palestinian state)의 등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 안보상의 전전이 있는대로 이스라엘군은 2000년 9월 28일 이전의 위치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미첼 위원회(Mitchell Committee)가 권고



한대로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정착촌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 폭력이 가라앉는대로 무고한 팔레스타인사람들이 일과 정상적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동의 자유도 회복되어야 한다.”<sup>12)</sup>

문제는 이스라엘의 협상거부태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클린턴행정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당시 야세르 아라파트를 수반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지도부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의 대등한 정치적 협상을 종용하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가한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평화적 해결방식이었다. 그러나, 부시행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추진했다. 그것은 두가지였다.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투쟁의 상징적 카리스마를 갖고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힘든 아라파트를 보다 온건한 협상파로 대체하는, 말하자면 팔레스타인관 정권교체였다.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의 주변 업호세력으로 이스라엘이 언제나 자신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했던 이라크의 정권교체였다.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통해 미국은 그 두가지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평화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을 선택한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전략적 행태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물론 계속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탈레반정권을 붕괴시킨 이후 미국은 탈레반 잔당소탕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하고 있을 뿐, 정치권력은 아프간 지역군벌들에게 넘겨주었다. 중앙아시아 전반에 대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국 패권팽창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아프간이라는 나라 자체는 미국에게 특별한 투자가 없다. 아프간전쟁후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지휘를 처음엔 영국에 넘기고 그 다음엔 터키에 맡긴 것은 그런 때문임이 틀림없다. 말하자면 전후 아프간의 관리 역할은 다자주의적 타협을 허용한 것이다.

전후 이라크 관리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전후 이라크에서 미국은 점증하는 피의 대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장기간의 직접적인 군사통치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국가들의 요구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후 이라크 관리에 다자주의적 틀을 배척하고 있다. 유엔의 역할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차적 역할에 국한시킬 것을 고집하고 있다.<sup>13)</sup>

그것은 물론 아프간이 가난한 불모지의 땅인데 비해서 이라크는 미국이 취할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을 비롯한 주변나라 대부분이 미국의 전쟁에 이미 적극 협력하는 동반자들이 되어 있었다. 서남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확립에 더 이상의 직접적인 개입 필요성은 그만큼 없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라크의 경우는 전쟁 승리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미국 패권의 안정적 유지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미국은 전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미군 사령관들로 하여금 이라크를 직접 군사통치할 것이며, 그 후에도 이라크의 관리권한을 (유엔과 같은) "외부기관"이 아닌 이라크 국민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이미 말하고 있었다. 국무장관 콜린 파월도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도 유엔은 이라크 재건에 중심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sup>14)</sup> 그것은 유엔과 같은 세계기구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미국의 힘과 주관에 의해 미국이 원하는 체제를 수립하는데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임에 틀림없었다.<sup>15)</sup>

이같은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전후 이라크 정치체제와 그 정권은 미국의 깊숙한 음양의 정치적 개입 속에 구축될 것이며, 그것이 전반적인 반미적 정서를 강하게 내포하게 될 전후 이라크 사회에서 매판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그 체제의 정당성은 간단 없이 도전받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미국은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가. 정치질서의 왜곡, 결국 민

12) George Bush, "Work with others to Defuse Regional Conflicts," Berlin, Germany, May 23, 2002.  
13) Warren Hoge, "Bush and Blair in Belfast to Discuss Iraq, U.N. and Europe," The New York Times, April 7, 2003.  
14) Edward Walsh and Peter Slevin, "U.N. Role in Postwar Government Debated: White House Claims Authority on Rebu Post, April 7, 2003.  
15) 이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견해는 다자주의적 틀을 수용하는 쪽에 가깝다. 예컨대,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선임멤버(ranking minority member)인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은 "미국은 전후 이라크에 대해 접근을 '국제화'하여 책임이 공유되고 처음부터 정통성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dward and Slevin, 앞의 기사.



주주의의 억압과 군사주의적 개입이 중추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시행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라크의 “체제변화”가 아니라, 정치지도부를 친미적인 세력으로 바꾸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건설하는 새로운 체제는 얼굴만 바뀔 뿐, 이라크 국민의 인권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억누르는 억압적 지배장치는 이름만 바뀐 채로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쟁이후 미군은 거의 매일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식 공격에 의해 사상자를 내고 있다. 전쟁과 점령의 정당성의 결핍은 미군의 안전의 결핍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이라크에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베트남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엔과 같은 국제조직에 이라크에 법치와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을 맡기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인의 인명손실을 거의 매일 겪으면서도 그 방법을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 이라크의 운명을 맡길 경우, 정당성을 결여한 미국의 전쟁과 점령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반발 때문에 이라크에 세워질 민주정부는 분명 반미적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정부의 군사정치경제관계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 즉 유럽, 러시아 중국 등과 맺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경우 중동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그 실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점을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현재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비단 아프가니스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아프간전쟁을 지원했던 파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여러 독재적인 권위주의 정권들이 미국이 지원하는 경제, 군사지원 속에서 미국의 엄호하에 억압적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연장된다.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문제는 더 이상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미국의 전쟁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더욱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한 파키스탄 군사정권의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미국의 결탁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이라크 체제 역시 이라크 자신과 주변 국가들에 그같은 새로운 모순과 긴장과 폭력의 구조를 증폭시키는 현상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 국방차관 폴 윌포워츠는 이라크를 독재로부터 해방시킨 다음 이라크에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만들어 중동 전체에 민주적 정치혁명을 확산시킨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내세운 바 있다.<sup>16)</sup>

윌포워츠는 아마 사람들이 2차대전후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 민주주의를 심어낸 성공스토리를 떠올리며 자신의 말을 수긍할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일/일본과 이라크의 차이는 명백해 보인다. 독일과 일본이 다시 미국에 도전하는 군국주의부활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공산주의세계와의 냉전에 동원하기 위해 두 나라에 자본주의경제와 민주정치를 부활시키는데 미국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중동과 이라크의 경우는 다르다. 중동지배를 위해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삼은 것이 민주주의 아니었던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테러주의를 지원해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중동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야말로 미국의 군사경제적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최대의 힘이 되지 않겠는가. 냉전시대에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 민주적 자본주의 발전을 지원한 것이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중동에서 미국이 봉쇄해야할 대상은 중동의 민중 그 자체, 그들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이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중동에 민주주의 정치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sup>17)</sup>

그러한 회의는 전쟁기간부터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전쟁을 주도한 럼스펠드와 윌포워츠의 국방부가 선호하는 전후 이라크정권의 최고지도자는 아메드 샬라비(Ahmed Chalabi)로 알려지고

16) Michael Dobbs, "For Wolfowitz, a Vision May Be Realized," *The Washington Post*, April 7, 2003.

17) 한국 광주에서 전두환의 군부가 시민들을 학살하고 난 9개월 후인 1981년 2월레이전행정부는 전두환을 백악관에 초청한다. 윌포워츠는 당시 국무 고위관료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윌포워츠는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했는데, 그는 의회에 나가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트 정부의 인권문제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력하고 탁월한 지도력"(strong and remarkable leadership)을 주목할 것을 촉구하곤 했다. Shorrock, "A Skewed History of Asia," *The Nation*, April 17, 2003. 미국의교사에서 윌포워츠의 경력은 제3세계의 민주주의를 거 못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있었다. 그는 수십년전에 이라크를 떠나 이라크사회에서 존재도 없는, 금융사기 전과자였다.<sup>18)</sup> 그가 한 망명조직을 이끌어왔지만 그런 조직 6개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의 권력기반은 리차드 펄(Richard Perle) 이나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와 같은 미국 국방부나 CIA 전직 고위 권력자들과 맺어온 친분이었다.<sup>19)</sup> 뿐만 아니라, “중동 정치혁명”을 주창하는 폴 윌포위츠와 국방장관 럽스펠드는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친이스라엘 정책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이라는 사실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sup>20)</sup>

아메드 살라비는 2003년 4월 초, 미국 CBS TV의 “60 Minutes”에 출연해 “선거를 치러 민주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라크가 새 헌법을 통과시키기까지 걸릴 시간을 2년 정도로 예상했다. 그럼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치러 민주정부를 세우려면 최소한 2년은 넘긴다는 얘기였다. 그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실질적인 미군정(미국은 “미군정-임시정부-민주정부”라는 3단계를 내세웠지만)을 지지한다는 얘기였다. 이것은 윌포위츠가 “6개월 이상” 정도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초과하는 군정기간을 지지함을 뜻하는 것이었다.<sup>21)</sup>

미국의 이라크 군정이 그리고 그 이후 지속시키고자 하는 친미정권이 이 나라와 이 지역에서 수행할 역할은 두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는 이라크 내의 친미체제 확립과 유지이다. 그러한 노력의 적대적 대상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정권의 두 번째 기능은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가운데 시리아, 이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봉쇄를 위한 기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미군은 언젠가 떠날 수 있겠으나, 이라크는 중동 전체에 대한 경제적, 정치군사적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기지로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 부시행정부의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Brent Scowcroft)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가 이라크에서 첫 선거를 했는데 급진파들(radicals)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그들이 정권을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sup>22)</sup>

### (3) 보이지 않는 전쟁: ‘소말리아 타입’

2002년 2월 미국 CNN 방송은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라는 한시간에 걸친 심층보도 프로그램에서 「블랙 호크 다운」(Black Hawk Down)이라는 도큐멘타리를 방영했다. 미국은 1993년 소말리아에 인도적 목적을 내세워 군대를 보냈다. 블랙호크라는 이름의 군용 헬리콥터에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두 대의 블랙호크가 추락했고 이어서 미군 특수부대와 소말리아 군벌인 아이디드의 민병대가 충돌했다. 그 결과 미군 18명이 숨지고, 이 와중에서 5-6천명으로 추정되는 소말리아인이 사망했다. 사망한 소말리아인 대부분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었다.

헬리콥터 추락후 전투에서 사망한 미군병사들의 시체를 아이디드 민병대원들이 끌고 거리를 행진하는 처참한 모습이 TV화면에 나온 얼마후 미국은 소말리아에서 철수했다. 이후 소말리아인들은 언제나 미국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왔다고 이 CNN 프로그램은 보도하고 있었다. 부시행정부는 아프간전쟁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자,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 알 카이다가 소말리아에 재집결하고 있다는 얘기를 흘리기 시작했다. 이 방송의 앵커 조나만 맨(Jonathan Mann)은 미국정부가 소말리아에 군사행동을 단행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끝맺었다.

이상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일단락된 2002년 초에 CNN이 지난 10년간 미국외교에서 소말리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요약한 것인 셈이다. 소말리아가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한

18) 살라비는 부유한 시아파 가문 출신인데, 요르단에서 은행사기와 횡령으로 22년간의 중노동형에 처해진 바 있다. Reuters, “Chalabi Sees 2-Year Stay in Iraq for U.S. Military,” The Washington Post, April 6, 2003.

19) Harold Meyson, “Preemptive Peace,” The Washington Post, April 8, 2003.

20) David Corn, “Bush’s Faux Peace Plan for the Middle East,” The Nation, June 25, 2002.

21) Reuters, 위의 기사.

22) Bob Herbert, “Spoils of War,” The New York Times, April 10, 2003.



중요한 전선(前線)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소말리아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대해서처럼 첨단무기전쟁이나 대규모 군대로 침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국방장관 럽스펠드는 소말리아에 대해 '보이지 않는 전쟁'(something you don't see)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의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의한 한반도 위기 등으로 세계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있지만, 소말리아에서는 이미 숨겨진 전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말리아는 미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앞서 CNN의 프로그램이 전형적인 예이지만, 미국의 언론이나 학술지 논문들은 소말리아에서의 1993년 미국의 군사개입을 언급할 때마다 말하는 '인도적 목적'에 대해 말해왔다.<sup>23)</sup> 과연 그랬는가를 우선 보아야 한다.

소말리아는 2001년 시점에서 약 7백만의 인구로 이루어진 나라다. 아프리카대륙 서북부의 아라비아반도 바로 밑부분의 돌출된 곳을 포함해 인도양쪽에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대륙 쪽으로는 위로는 이디오피아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케냐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나라가 미국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1년 이후 중앙정부가 붕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문이다. 서로 다른 힘센 몇몇 부족들이 나라를 쪼개가진 가운데 끊임없는 내전상태에 놓여있었다. 2000년 10월 임시중앙정부(Transitional National Government: TNG)라는 것을 구성했으나, 이것은 2002년 현재 수도인 모가디슈(Mogadishu)조차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 북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에는 각각 자칭 공화국이 따로 통치하고 있다. 북서부 지역은 소말리랜드(Somaliland)가, 북동부 지역은 푼트랜드(Puntland)가 임시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다스리고 있다.<sup>24)</sup>

말하자면 소말리아는 무정부상태에 있어온 셈이다. 이러한 무정부상태가 왜 미국에게 문제인가. 그것은 미국을 대신해 확실하게 이 나라에서 반미적인 테러리즘 활동을 축출해낼 수 있는 정치권력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 나라의 무정부상태는 오사마 빈 라덴 등과 같은 국제적인 테러조직 네트워크가 이 나라를 테러활동의 근거지로 활용하는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1993년 미국이 군사개입을 강행한 것도 이미 그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유엔은 1992년 내전으로 악화된 기아에 허덕이는 소말리아인들을 위한 유엔의 식량공급 환경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그 일부로 미국은 엘리트 특수부대인 레인저스(Rangers)와 델타 포스(Delta Force) 부대를 보냈다. 이들의 임무는 수도 모가디슈를 장악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두 군벌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 군벌 중의 하나가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Mohamed Farah Aideed)였다.

클린턴행정부때인 1993년, 그 특수부대의 일부인 약 100명의 미군은 모가디슈에서 아이디드의 두 주요 참모들을 생포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했다. 특수작전용인 헬리콥터 블랙 호크(Black Hawk)가 동원되었다. 헬리콥터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목표건물에 침투한 부대원들은 그 두 인물을 생포했다. 그러나 곧 아이디드 민병대가 미군 헬리콥터 두 대를 격추해 떨어뜨렸다. 미군 특수부대와 소말리아인들 사이에 15시간 동안 격전이 벌어졌다. 미군 증원군이 도착해 대부분의 미군은 생포한 두 명의 아이디드 참모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갔다.<sup>25)</sup> 이들 생포된 두 명은 몇 달 후에 풀려나게 된다.

그 전투에서 미군 18명이 죽었고, 앞서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이라도, 소말리아인은 미군의 강력한 화력과 나중에 도착한 증원군의 진압작전으로 5천여명이 죽음을 당했다. 살해된 미군 중에 두명은 소말리아의 군중들이 트럭에 끈으로 매달아 모가디슈 시내를 행진하였다. 미국인들은 이 비디오 화면에 진저리를 쳤다. 클린턴행정부는 곧 미군을 소말리아로부터 철수했다. 철수의 명분은 것처럼 미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소말리아같은 아프리카의 혼란스런 오지에서 '인도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23) 한 예로, John Hillen, "Picking Up U.N. Peacekeeping's Pieces: Knowing When to Say When,"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2.

24) *The Washington Post*, 'Fact about Somalia,' February 10, 2002.

25) Elizabeth Snead, 'The Special Operation of "Black Hawk Down": Hollywood and the Military Join Forces to Re-create A Horrific & Heroic Battle,'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3, 2002.



그러나 미국의 1993년 군사작전의 직접적인 목표물이었던 두 인물은 아이디드의 참모인 동시에, 실제로는 오사마 빈 라덴이 파견한 고문관들로 미군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그 작전에 참가했던 미군들은 빈 라덴의 두 참모들을 생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그것은 영웅적이고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나중에 헐리우드와 미국방부가 협력하여 영화(Black Hawk Down)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에서 그 전투는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군들의 영웅적이고 한편으로 비극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공적인 투쟁으로 묘사되었다.<sup>26)</sup>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미군들만이 아니고 미국 정부 자체가 1993년부터 소말리아가 알 카이다 활동의 한 중심지가 되었으며, 빈 라덴이 아이디드에게 자신의 최고위 참모들을 파견해 그를 돕고 있었다는 인식을 이미 갖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그 후에 벌어진 테러사태들, 특히 1998년에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Dar es Salaam)과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미국대사관 폭파를 테러리스트들이 준비한 장소가 소말리아라고 의심하고 있다.<sup>27)</sup> 즉 무정부상태 속의 소말리아에서 여러 군벌들이 빈 라덴의 테러조직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그래서 이 나라가 반미 국제테러의 주요기지가 되어있다는 인식이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소말리아에 군사개입하고 있는 주요근거가 되고 있다.

9/11이후 미국이 소말리아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1993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믿을만한 중앙권력이 없으며, 그러한 정치적 무정부상태는 빈 라덴처럼 국제적인 테러네트워크가 근거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인 것이다. 미국이 전세계적인 대테러전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지구 전체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협력하는 정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전쟁의 절반은 각 나라의 친미 또는 적어도 미국에 협력하는 정권들이 대신 해주는 전쟁인 것이다.

미국이 9.11이후 대테러전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의 하나는 예멘, 이집트, 수단 등이 이슬람국가들이면서도 그 나라 정부들이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협력하여 미국을 대신해 테러조직 용의자들을 적극 소탕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2002년 1월 초 당시 500여명의 테러용의자들이 미국 바깥에서 지역정권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던 것이다.<sup>28)</sup>

그런데 소말리아는 그 지속되는 내전 때문에, 그리고 주민의 90퍼센트가 이슬람이며, 갈수록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에, 그곳이 반미적인 국제테러조직의 활동무대로 남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소말리아를 주목하고 위협하고 다루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하는 이유다.

그러나 소말리아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그 정치적 조건이 다른 만큼 소말리아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다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가면서 알 카이다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패주했지만, 곧 다른 나라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전지구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령관들(Commander-In-Chiefs: CINCs)에게 알 카이다 조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다른 나라들로 잠입할 때 그들을 붙잡는데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

미 군부가 소말리아에서 벌일 것으로 보이는 군사작전은 이 지시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소말리아작전은 한 미국관리가 밝힌대로, 소말리아가 아프가니스탄 대신에 반미 국제테러네트워크의 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작전(a preemptive military operation)이 될 것이며, 또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아프가니스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시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였다.<sup>29)</sup>

그만큼 소말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와는 달리 덜 공개적인 정보활동(low-profile intelligence actions) 중심의 작전으로 기획되었다. "소말리아는 아프가니스탄

26) Elizabeth Sneed.

27) Thomas E. Ricks, 'Allies Step Up Somalia Watch: U.S. Aims to Keep Al Qaeda at Bay,' *The Washington Post*, January 4, 2002.

28) Thomas E. Ricks, 'Allies Step Up Somalia Watch.'

29) Thomas E. Ricks.



과는 다를 것으로 본다. 럽스펠드장관이 말한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미 국방부 한 관리의 말이 잘 시사해준다.<sup>30)</sup>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미국이 타깃으로 삼는 반미테러집단과 갈등관계에 있는 세력들과, 그들이 아무리 억압적인 집단들이라 하더라도, 동반자로 삼는 대리전쟁의 양상을 띠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찰머스 존슨이 언급한 바 있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새로운 스타일의 미국의 비밀군사공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될 것이다.<sup>31)</sup>

1993년 소말리아에서 이른바 ‘인도적 개입’이란 미명아래, 그러나 실제로는 반미테러집단의 두 명의 조직원을 납치하기 위해 벌였던 ‘미니전쟁’에서 미국이 18명의 인명손실을 입은 대가로 5천 여명의 소말리아인을 대량살상했던 것에 비추어볼 때, 미국이 앞으로 소말리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 곳곳에서 전개할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미군과 그 지역 대리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며 죽어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희생자들답게 바깥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채로.

## 2. 미국 군사패권주의의 정화(精華): ‘대량살상무기의 정치’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의 폭력성과 기만성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한 묶음의 모순 덩어리에 놓여있다. 미국이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전쟁을 벌이는 최대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라는 것이다. 이 논리의 근본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이른바 미국이 불량국가로 지목한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국제적 노력을 추구하기보다, 일면 협상하면서도 동시에 근본적 불신과 군사적 위협으로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전형적인 행동패턴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은 미국이 정한 게임의 룰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든 해당국가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틀이 정립되거나 일관성있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기회를 허용하지 않은 했다.<sup>32)</sup> 그 결과는 두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해당국가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또한 확인되지 않은 개발의혹을 빌미로 미국이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사태이다. 이 경우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라는 것이지만, 그 실제 동기는 다른 데에 있다. 이라크의 경우가 그 전형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그같은 태도와 정책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해당국가 지도부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벼랑끝 전략으로 맞서게 되는 상황이다.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30) Thomas E. Ricks.

31) 1991년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 미 국방부는 합동교환훈련(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 JCET)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미 군부가 해외 어떤 나라든지 언제라도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그 부대들을 현지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구실로 그 나라 현재 군대에 특수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클린턴행정부때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밑에서 미 군부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모든 특수부대(special forces groups)를 하나로 통합한 ‘특수작전사령부’(Special Operations Command)가 1998년의 경우 110개 나라에서 미 특수부대를 파견해 JCET 작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특수부대들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대부분의 그 나라 군부가 그 나라 내부 반란 또는 저항세력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다. 미국은 그것을 완곡어법으로 ‘해외 내부방위’(Foreign Internal Defense: FID)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전 중 하나가 터키의 산악 군부대들에 핵심적인 특수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 무렵 이 부대들은 커드인들(Kurds)에 대한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 22,000명을 학살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유럽연합은 이 때문에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해왔다. Chalmers Johnson,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0, pp.72-73.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터키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터키의 유럽연합가입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중동의 패권자로서 미국이 친미정권의 독재와 소수민족 억압은 지원하고, 자신의 안보/경제이익에 도전하는 반미정권의 독재와 소수민족 억압은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에 닮아 나다.

32) 그것은 미국내 정책집단 및 정치권 안에서 보수-리버럴의 권력관계 변동에 따른 정책노선의 부침때문일 수도 있고, 의식적인 병행전략의 결과일 수도 있다.



둘째,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이중기준의 적용이다. 이스라엘과 1990년대 초 이전 아파테이트체제 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정권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미국의 방조, 그리고 1990년대 말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의 무바라크 군사독재정권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국제제재를 해제시킨 바 있다. 이같은 명백한 이중기준에 대해 유럽과 유엔이 사실상 견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미국의 방조에 공모해왔다는 사실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셋째, 미국이 펼치는 대량살상무기의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가장 철저한 자유를 부단히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목록을 몇가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1) 대량살상무기의 '꽃'인 전략 핵무기 감축의 기만성

2002년 5월 24일, 러시아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미국 조지 부시대통령은 전략무기인 장거리 미사일 핵탄두를 향후 10년 안에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이른바 '전략적 공격무기 감축협정'(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에 서명했다. 두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탄두 숫자는 각각 6000기에 달한다.<sup>33)</sup> 이 협정이 이행되는 2012년이 되면 두 나라 전략핵탄두는 각각 1700내지 2200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이전의 클린턴행정부에 비하여 더 본격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대신 공격적 전략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 협정을 통해서 부시행정부가 줄이게 된 규모는 클린턴행정부때 러시아와 추진한 제3차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III)의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마치 새로운 추가감축인 것처럼 보이려는 것은 미사일방어망체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 세계여론의 반대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목표하는 추가감축 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이 그같은 감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2000기 안팎의 전략 핵탄두 숫자이다. 이 핵무기 규모는 미국의 핵무기를 관장하고 있는 미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 STRATCOM)가 1990년대 초 및 중반에 걸쳐 이미 정립한 핵전력구조개편 구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시행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전략틀"(new strategic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냉전시대 미국의 핵정책의 지침이었던 오랜 전략적 사고틀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ICBM, SLBM 및 전략핵폭격기라는 3각 전략핵무기체계(triad)를 유지하며, 이른바 신뢰성있는 핵억지력(credible deterrence)을 견지하고, 또한 적의 전략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대군사력전력을 확보(counterforce targeting)한다는 전략틀이다.<sup>34)</sup>

1990년대 이후 미러 핵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또 하나의 위험한 요소는 양다리걸치기(hedge)의 문제이다. 1987년의 중거리핵폐기협정(INF Treaty)과 1991년의 제1차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I)은 전략 핵폭격기 및 미사일과 같은 핵무기운반체계(delivery vehicles)의 감축과괴를 규정했을 뿐, 핵탄두 자체의 해체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축협상에 따라 핵무기운반체계는 감소하더라도, 거기에 장착되었던 탄두들은 미사일 등으로부터 분리만 되었을 뿐 그대로 미국의 핵무기저장고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 탄두들은 유사시 미국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예비핵무기(active reserve or inactive reserve)들이다. 이것들이 양다리걸치기의 재료들로 되고 있다. 감축한 핵탄두를 해체하여 폐기하지 않고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다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reversible) 하는 조건은 미국정부가 고집하여 관철했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표현대로, 이 협정은 도피조항들로 점철되어 있다.<sup>35)</sup>

33) Reuters, 'U.S. and Russia Sign Nuclear Weapons Reduction Treaty,' The New York Times, May 24, 2002.

34) Hans M. Kristensen, "The Unruly Hedge: Cold War Thinking at the Crawford Summit," Arms Control Today, (www.armscontrol.org).

35) David E. Sanger, 'Bush and Putin to Sign Treaty to Cut Nuclear Warheads,' The New York Times, May 14, 2002.



감축대상 탄두들을 예비용으로 유지한다는 개념은 중거리핵폐기협정 이후인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미국 핵전략에서 정립되었다. 그리고 클린턴행정부때인 「1994년 핵정책검토」(Nuclear Posture Review of 1994)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이것은 다시 부시행정부때인 2001년 12월 도널드 럼스펠드 국장장관 책임하에 작성되어 2002년 1월에 공개된 「2001년 미국핵정책검토」(U.S. Nuclear Posture Review of 2001)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 예비용 탄두들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핵탄두에 결합이 발전될 때 대체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핵정책에서 그 대부분의 핵심적 용도는 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사시에 미국의 핵무기전력을 순식간에 대량확대하려는 데에 있다.<sup>36)</sup> 바로 여기에도 1990년대 클린턴행정부에 이어 21세기 초입의 부시행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 핵전략의 파괴적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핵탄두 숫자를 향후 10년간에 걸쳐 2,200내지 1,700개정도로 줄이되, 철거된 핵무기들(deactivated weapons)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저장소에 보관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군축이라고 하기 어렵다. 러시아 역시 철거된 핵무기들을 유사시 다시 쓸 수 있도록 저장소에 간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감축대상 핵탄두들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유사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을 러시아는 원래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러나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 서명을 며칠 앞둔 2002년 5월 15일, 러시아도 자신의 감축대상 전략핵탄두의 일부를 해체하지 않고 저장해두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완강한 태도가 러시아 역시 정책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러시아의 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는 저장하고 일부는 리사이클하고 일부만 파괴할 것이다. 미국이 하는대로 우리도 따라서 할 것이다.<sup>37)</sup>

이 협정은 감축대상 핵탄두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두었다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전배치된 것과 저장된 것, 그리고 이 협정의 대상인 전략핵무기 뿐 아니라 이 협정에서 제외된 전술핵무기들까지 합하면, 두 나라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탄두 수는 1단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sup>38)</sup>

미국의 전략 핵무기 감축은 이같은 기반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가운데, 그 외관상의 전략무기 축소를 사실상 실제 전쟁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하고 정확한 첨단 재래식 무기들로 채우겠다는 발상을 「핵전략검토」에 담고 있다. 걸프전 이래 미국이 주도한 여러 국지전에서 재래식 첨단무기로 쉽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는 미국인들은 전략핵 못지 않게 첨단 재래식 무기를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무기그룹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 국방부 차관 폴 윌포위츠(Paul Wolfowitz)는 변동하는 세계정세에 맞추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모두에서 미국의 군사능력을 재건하거나 새로운 능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저변의 토대를 갖추는데 어느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sup>39)</sup> 그 일환으로 이번이 핵정책 검토문건은 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대로 미국의 핵무기실험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약을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정권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2001 핵전략검토」는 미사일방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12월 러시아정부에 탄도미사일방어제한협정(ABM Treaty)에서 그로부터 6개월후 탈퇴한다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2002년 5월 부시행정부가 서명한 러시아와의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은 전략핵탄두의 숫자를 적정화하면서 그 대신 미사일방어의 본격적인 추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담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미사일방어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일정한 수준 자신의 공격적 전략핵무기도 유지한다는 정책, 결국 핵무기를 평화와 안보를 위한 무기로 정당화하고 유사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핵무기주의를 견지하는 것이다. 전략

36) Kristensen, p.2.

37) 'Significant Nuclear Reductions or Maximum Nuclear Flexibility?', Sunflower, June 2002.

38) 'An Urgent Call: End the Nuclear Danger,' Sunflower, June 2002.

39) David Krieger, "The US Nuclear Posture Review: Putting the Promise of Disarmament on the Shelf," (www.wagingpeace.org).



공격무기감축협정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최대한 감축한다 해도 두 나라가 각기 유지하게 될 1700개의 전략핵탄두란 3000개의 도시를 충분히 파괴하고도 남은 규모로 평가된다.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핵무기로도 지구상의 인류문명을 종식시킬 수 있다.<sup>40)</sup>

미국의 핵무기주의는 단지 견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일시적인 잠복기간을 거친 뒤 다시 활동하듯, 새로운 기지개를 펴고 있음을 암시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탈냉전이 시작되던 1989년 미국은 핵탄두를 폭발시키는데 쓰이는 플루토늄 핏(plutonium pits)의 생산을 중단했었다. 2002년 5월 31일 미국 에너지부는 이 플루토늄 핏의 생산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22억달러내지 44억달러의 건설비용이 예상되는 생산공장은 2020년부터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미 에너지부는 공장부지 선정 작업을 2002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스펜서 에이브러햄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억지능력의 안전과 안보와 신뢰성을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핏의 생산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41)</sup>

1990년대의 일시적인 외관상의 휴지기를 거쳐 21세기 초입에 이처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듯 보이는 미국의 핵무기주의 정책은 기존의 핵무기보유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주의도 새삼스럽게 부추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영국이다. 지난 약 50년동안 영국의 핵탄두를 제조하고 관리해온 영국 원자무기센터(Atomic Weapons Establishment: AWE)는 알더마스턴(Aldermaston)에 새로운 핵폭탄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이 밝혀졌다. 여기서 생산하고자 하는 핵탄두들은 테러리즘 대처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새로운 차세대형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결정이 이른바 제3의 길을 주창하며 등장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내린 가장 중대한 결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sup>42)</sup>

## (2) 핵무기 등 반인도적 무기의 실전화 프로그램들

부시행정부는 '2001 핵정책검토'에서 '공격적 핵억지'(Offensive Nuclear Deterrent)라는 개념을 만들었다.<sup>43)</sup> 그것은 핵무기를 다양한 상황에서 실전용으로 개발한다는 개념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영국이 새로운 핵무기공장을 건설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도 그와 깊은 관련이 있어보인다. 미국에게 있어서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전략에 있어서 핵무기를 필요할 때는 선제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핵전략론에서 핵억지란 핵무기는 적대세력의 핵무기사용을 억지하는데 집중되어온 것이 일반적인 이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노골적으로 공격적 핵억지라는 개념을 통해 핵무기를 실제 선제공격용 실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개념을 크게 확장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점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해보인다.

미국과 러시아는 2002년 5월 서명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991년의 전술핵무기폐기선언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여전히 수천기씩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short-range, tactical nuclear weapons)에 대한 통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갔다. 미국은 2002년 1월 의회에 제출되었고, 그해 3월 언론에 보도된 「핵전략검토」는 냉전 시대에 이미 기본적으로 내포되어있던 핵전략이지만, 공개적으로 천명되지는 않았던 중요한 독트린 하나가 노골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비핵국가와의 전쟁에서도 전술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핵의 유연대응"(nuclear flexible response)이라는 이름하에 잠재해있던 발상이다. 제3세계의 비핵국가에 대한 전술핵 선제 사용을, 북한을 포함한 대상국가들까지 명시하여, 명확하게 공식화한 것은 분명 그 노골성에서 새로운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부시정권은 향후 미국 핵무기개발의 방향의 하나로 병커파괴용 전술핵무기(bunker-buster nuclear weapons)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40) David Krieger, 'Nuclear Dangers Remain After Bush-Putin Agreement,' May, 2002, www.wagingpeace.org.

41) 'US To Construct New Plutonium Pit Production Plant,' Sunflower, June 2002.

42) Mark Townsend, 'Secret Plan for N-bomb Factory: Berkshire plant will build weapons for use on terrorists, say ex-June 16, 2002.

43) Townsend, 앞의 글.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포함해 자신이 불량국가로 지목한 국가들과의 분쟁에서 전쟁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그 전쟁을 언제라도 전술핵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 특히 위의 「핵전략검토」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북한, 러시아 및 중국” 7개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다섯나라는 물론 비핵국가들이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실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2002 핵전략검토」에 따르면, 이라크전의 양상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핵무기사용은 피해갔지만, 미국은 국제사회가 핵무기와 함께 반인도적 무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두가지 대량파괴무기를 이라크전에서 사용했다. 하나는 벙커파괴용으로 알려진 열화우라늄탄이다. 이 폭탄은 폭발시 방사능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은 이미 이 폭탄을 사용했으며, 그 영향으로 이라크 민간인들의 암과 기형아출산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또 하나는 집속탄(cluster munitions)으로 알려진 동시다발폭탄이다. 이 탄두는 그것 자체가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이지만, 불발탄으로 남을 경우 언제라도 다시 터져 인명을 살상하거나 불구로 만들 수 있는 대인지뢰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다.

미 공군은 1991년 걸프전에서 이 폭탄을 광범하게 사용했으며, 1999년 유고슬라비아/코소보 전쟁에서 사용했고, 또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도 사용했다. 「국제인권감시 위원회」(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991년 걸프전쟁에서 사용한 이 집속탄의 효과로 그 전쟁이 끝난 후에만도 4천여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그 폭탄으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전쟁 당시 죽거나 다친 미군중 적어도 80명은 그 폭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44)</sup> 미국은 이라크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은밀한 보유나 사용의 증거를 찾아낼수 없었지만, 미국 자신의 반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은 이미 일상화되어버린 것이다.

### (3) 대량살상무기의 우주화: 우주의 독점적 군사화 추구

2002년 6월 26일,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미국우주사령부를 미국전략사령부와 하나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 통합은 2006년 10월부터 발효된다고 했다. 이것은 미사일방어와 함께 미국내에서 우주의 군사화작업 추진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럼스펠드가 국방장관이 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할만하다.

미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 StratCom)는 핵무기를 관장하는 지휘부다. 우주사령부(US Space Command: SpaceCom)는 군사우주작전(military space operations),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computer network operations), 그리고 우주작전기획(space campaign planning)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부다. 부시행정부는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럼스펠드는 그 통합의 변으로, “이 두 사령부의 역할은 발전을 거듭하여 지휘구조의 중복성을 극복하고 정책결정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sup>45)</sup> 두 사령부를 통합한 새로운 조직은 미사일공격에 대한 조기경보와 미사일방어 그리고 장거리 재래식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와 그에 대한 방어를 주업무로 할 것이라고 했다.

원래 미우주사령부의 역할 자체가 콜로라도에 있는 ‘50th Space Wing’의 모토가 정확하게 ‘우주의 지배자’(Master of Space)인 것처럼(Enviro Videon: *Star Wars Returns*), 그것은 이미 우주의 독점적인 군사적 장악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부시행정부가 미전략사령부와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추진해온 우주의 군사화작업의 위험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미 전략사령부는 핵무기를 지휘하는 곳이다. 이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통합함으로써, 핵무기운용, 미사일방어체계구축, 그리고 우주의 군사적 장악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것은 미사일방어와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우주의 군사화작업을 촉진하게 될 것을

44) Human Rights Watch, “U.S. Using Cluster Munitions in Iraq,” April 1, 2003.

45) Department of Defense, ‘DoD Announces Merger of US Space & Strategic Commands,’ June 26, 2002. www.defense



의미한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오래전부터 미 국방부와 협력 속에서 우주선들의 추진연료를 핵연료로 하는 것을 추구해왔다. 핵연료로 우주를 날아 다니는 미국의 우주선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핵무기들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왔다. 언제 지구에 떨어져 지구의 삶과 환경을 파괴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Enviro Video가 포착한 것처럼, Vision for 2020 등의 미국의 공식적인 국방전략 문서들은 미국이 향후 우주에 배치하는 시설들의 운영에너지를 플루토늄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무기수준의 우주시설은 현실적으로 핵연료밖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우주무기체계를 전제로 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것은 우주에 군사무기체계 배치를 반대하면서 우주의 시설은 전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의 것이어야 하고 그 운영에너지는 모두 태양열같은 자연적 에너지로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방주의적으로 우주의 독점적 군사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nviro Video가 포착한 한 연설에서, 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유럽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순방을 마치고 막 귀국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브리핑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이를 환영하는 한 공화당 의원은 '우주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약들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럽방문에서 럼스펠드 장관이 그들에게 말하고 온 것은 '당신들이 우리의 미사일방어에 찬성해주면 좋고 찬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다'고 찬사의 말을 하였다. 실제 이미 미국은 2002년 6월 13일 정식으로 러시아와 1972년에 맺은 탄도미사일방어제한협정(ABM Treaty)을 탈퇴하였고, 1967년에 맺은,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우주협정」(Outer Space Treaty)을 무시하면서 본격적인 스케일의 미사일방어와 우주의 군사적 장악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를 다음의 프런티어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우주의 독점적인 군사적 장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노선은 그같은 국제규범 거부와 유린의 리스트로 점철되어 있다. 냉전시대이후 미러간의 군비통제체계의 핵심이자 그 상징인 탄도미사일방어제한협정(ABM Treaty)에서 탈퇴하였고, 2002년 5월 6일에는 빌 클린턴 전임대통령이 2001년 12월 31일이라는 그의 임기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서명했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대한 참여를 공식 철회했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이 비핵국의 핵무기개발을 막는 대신 기존의 핵무기보유 강대국들이 약속한 핵군비감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식적인 보고절차 정립안을 부시행정부는 앞장서 거부했다. 「생물무기금지협정」(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들을 중단시키려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행위와 우주배치용 무기 자체를 금지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sup>46)</sup>

클린턴행정부때에도 이같은 국제규범 거부의 행태가 있었다. 「대인지뢰금지협정」(Treaty Banning Anti-Personnel Mines: Landmines Treaty)을 클린턴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이유로 거부했었다. 클린턴행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된 「포괄적핵실험금지협정」(CTBT)은 또한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이 비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하에서 특히 9/11 사태 이후 대량살상 무기 관련 국제규범형성에 대한 미국의 보이코트는 매우 심각한 것임에 틀림없다.

### 3. 안전한 전쟁-불안한 세계, 강력한 미국-위험에 처한 미국인

9/11이 미국인들의 의식에 던진 충격은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구대륙과 야만의 세계로부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안전한 대륙'이라는 개념이 무참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위기의 일상화를 뜻했던 냉전의 시대가 지나고 탈냉전의 시대에 이르러 오히려 미국인들의 대륙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되었다.

미국에서 '본토안보'(home security)라는 개념은 냉전시대 핵군비경쟁의 유산으로부터, 즉 확산

46) Carah Ong, "Force Above Law: The New International Disorder?," www.wagingpeace.org (Website of the Nuclear Age July 11, 2002.



되어온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9/11 이전까지는 레이건행정부때 본격화된 미사일방어 개념을 부활하는 것이 본토안보의 주요 내용이었다. 9/11사태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는 개념의 근본적인 확장과 심화를 의미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대륙이 아니라는 인식은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의 심화는 전후 미국의 역사와 정치가 미국이 패권자로서 지배한 바깥세계의 척칙한 역사와 야만 그 자체와 깊고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미국인들의 인식에서 그러한 야만의 침투는 미국에 대한 타문명세계의 비이성적 증오에 바탕한 테러리즘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결합할 가능성이라는 지극히 외생적인 것이었다.

안전한 대륙은 사라진 이 시점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바깥세계의 불안정과 야만을 관리하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1991년 이라크에 대한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미국이 실험하기 시작한 '안전한 전쟁'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안전한 전쟁이란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전쟁을 뜻했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전쟁이란 미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전을 피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전쟁을 말한다. 그것은 미국의 타자에게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를 던지는 가운데 미국 자신에게는 안전하고 통쾌한 자기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 미국이 믿는 것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물론 압도적으로 우세한 첨단군사무기 중심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적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미국 주도의 전지구적인 동맹체계의 확고한 유지였다. 적을 동맹의 사슬로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은 냉전시대 이래 하나의 불변하는 상수라고 할 때, 탈냉전시대에 미국이 새롭게 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첨단무기에 의한 안전한 전쟁이라는 개념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사과학주의에 대한 의존을 근본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미국은 언제나 적보다 더 파괴력과 정밀성이 뛰어난 첨단무기를 통해 미국에게 안전한 전쟁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냉전시대 미국이 치러낸 두 차례의 전쟁, 즉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그러한 목표는 불완전한 것이었고, 결국은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만명의 미국인 전사자는 전쟁을 담당할 정치권력에게 정치적 시련을 가져다주었고 어김없이 정권교체를 가져왔다. 1991년의 걸프전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불안정한 세계의 위협을 관리하는 장치로서 안전한 전쟁의 실현 가능성을 맞보았고, 1990년대 미국은 탈냉전의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 기술을 완숙시키기 위한 군비투자를 결코 늦추지 않았다. 미국에서 '안전한 전쟁'이 현실적인 정치외교적인 수단으로서 확립되기에 이른 시대가 곧 컴퓨터 전쟁게임이라는 첨단오락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대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컴퓨터 전쟁게임의 요체는, 전쟁의 스틸을 체험하되 그 참혹과 피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 그래서 오락이 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안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불확실성과 불안정 그리고 야만으로 미만한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전쟁'을 추구하지만, 그 안전한 전쟁의 수단은 과거로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독과점해온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질적으로는 더 가용한 방식으로 확충하는 가운데 열화우라늄탄, 집속탄, 지하병커파괴용 핵무기와 같은 새로운 가공할 대량파괴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실전배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미국에게는 안전한 전쟁의 수단일 수 있으나, 세계에 대해서는 가공할 충격과 공포를 강제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안전한 전쟁은 미국의 패권적 힘을 더욱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인들은 안팎으로 더 무력해지고 더 높아진 위협에 처해있다. 안보국가체제로 재돌입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자유도 위협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개인들로서의 미국인은 세계 곳곳에서 증오와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한 전쟁의 환상은 이른바 부시행정부의 "예방전쟁"론을 탄생시켰다. 전쟁이 미국 대외정책을 관철하는 외교의 안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미국이 안전한 전쟁의 능력에 바탕한 예방전쟁을 통해 자신의 패권을 지켜내는 세계의 질서란, 정치적 상상력이 더욱 왜소해지고 군사기술주의적 상상력과 그에 대한 경쟁적인 자원투자가 팽창하는 곳이 될 수 밖에 없다.



#### 4. '인간'의 경계와 '부차적 손실'

탈냉전시대 미국인들의 세계인식을 지배하는 새로운 이분법, 그리고 그에 바탕한 '문명안보론'의 등장을 이라크전쟁 전후의 전반적인 지적 풍토와 관련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냉전시대에 확립된 미국인들의 세계인식은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라는 이분법에 지배되었다. 미국 정치 권력기관들은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탈냉전시대에 들어 미국의 정치적 지식인들이 새롭게 확립한 세계인식의 이분법은 문명과 반문명의 대립이었다. 서양의 문명과 비서양세계의 반문명 또는 야만성을 대치시키는 사고였다. 1996년에 출간된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명하게 드러낸 징표라고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 유고연방의 붕괴와 함께 발칸반도를 피로 물들이기 시작한 보스니아의 인종청소와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의 대학살사태와 같은, 유럽의 변방이나 비서양세계의 야만적인 상황을 세계가 목도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문명충돌론이 지적 유행을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그러한 야만적 사태를 문명과 반문명의 이분법적 틀로 파악하는 데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었다.

헌팅턴의 논리를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리스문명과 기독교문명으로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서양문명의 고유한 업적이고 또한 양도불가능한 서양만의 것이고, 비서양세계는 근본적으로 야만에 머물러있을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야만의 타자'일 수 밖에 없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그 논리는 제국주의적 침탈의 야만과 두 번에 걸친 거대한 야만적 전쟁, 그리고 르완다와 유고적인 야만의 원형이라고 할 홀로코스트가 20세기 서양문명의 한 중심에서 전개되었다는 역사적 진실과의 대면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지적 사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미국의 권력집단과 언론 그리고 대중의 사유를 지극히 자연스럽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1994년 르완다의 대학살사태는 벨기에 식민주의세력이 르완다의 다수종족인 후투족을 지배하기 위해 소수종족인 투찌족을 식민지하급관리계층으로 교육시키고 활용하면서 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것으로서, 근대 서양문명의 야만적 메커니즘과 깊은 내적 연관성을 갖는 것이었지만, 미국과 서양에 흥미하는 문명충돌의 사유는 그 진실에는 등을 돌렸다.

문명과 반문명의 이분법은 비서양세계에 의한 "오염"과 도전으로부터 서양문명세계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며, 그 결과 헌팅턴의 주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동맹은 단순한 안보동맹이 아닌, 문명안보동맹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sup>47)</sup> 근대사에서 중동에 대한 서양의 침탈, 그리고 전후 중동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질서가 내포하고 있는 야만성과 그에 대한 아랍세계의 저항의 동학, 그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을 문명안보론은 편리하게 문명과 야만세계의 대립으로 은폐한다. 이 은폐로 인해 미국인들은 9/11의 정치적 성격을 자기성찰할 능력을 상실하며, 미국의 대중은 미국 권력집단이 야만적인 대외정책을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9/11은 수천명의 민간인에 대한 대량살상의 테러로서, 그 자체가 반인류적 범죄이지만, 그 테러와 어떤 직접적 관련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한 미국의 전쟁은 9/11과는 달리 수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천명의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살상을 동반한 반인류적 전쟁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그것은 문명세계와 야만세계 사이의 충돌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차적 손실'(collateral damage)이라고 치부하는데 익숙해있다. 여기에는 '인간다운 인간'의 경계에 대한, 문명론의 탈로 포장된 야만적 경계설정, 그리고 그 야만세계의 반(半)인간들은 '살리기 위해 죽여도 좋다'는, 도덕적 명분으로 포장된 군사주의의 유서깊은 논리가 깊이 스며있다.

심오한 인도적 재난을 수반하는 반인류적 범죄행위가 야만의 세계를 통제하는데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간주된다. 미국 권력집단이 주도하고 언론이 승인하며 대중이 추종하는 탈냉전시대 이 새로운 이분법이 미국패권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추

47) Samuel P. Huntington, "The West: Unique, Not Universal,"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6, pp.45-46.



인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당화해주고 있다. 이 사실 또한 21세기 초입 현실 국제질서의 비극적 측면이다.

## 5. 냉전의 유산과 군사주의 집단의 재강화

미국이 동맹국들 내부의 일정한 비판과 저항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이라는 일방주의적 수단을 선택한 데에는, 2000년 대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간발의 표차와 특이한 미국의 선거 결정체도로 이득을 본 보수적인 부시행정부의 등장이라는, 일정한 우연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선거결과와 미국의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그의 보수적 외교정책노선은 미국-미국의 국가권력으로 대표되는-의 선택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또한 9.11 이후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또는 확대연장으로서는 이라크전쟁의 강행은 어쨌든 미국인 절대다수의 지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미국인들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고 왜 그 선택을 지지해왔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진행된 미국인들의 세계인식이라는 내면풍경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태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그 냉전의 유산으로서 강력한 군사주의 집단이 미국사회와 정치에 유력한 실체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과 함께 미국의 군사주의집단은 역사적인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다. 걸프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경제난과 함께 탈냉전적 외교정책 전환에의 정치적 도전의 징표였다. 그러나 199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정치적 선택은 보수적 군사주의 세력의 복권이였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동력은 2차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전지구적 규모의 대립구조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지극히 군사화된 사회로 되었다. 세이머 멜만은 그러한 미국사회경제질서를 “영구전쟁경제”(permanent war economy)로 규정했지만, 그러한 군산복합체적 세계관은 탈냉전의 세계에서도 ‘잠재적 군사공격목표’에 대한 탐색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들은 쉽사리 ‘현존하는 위험’(present danger)으로 규정된다. 그 결과, 많은 정치외교적 성격의 문제들이 군사적 문제로 치환되고, 그것은 다시 군산복합체가 신봉하는 군사과학주의(military scientism)로 뒷받침된다. 그럼으로써 미국인들의 안전은 오히려 약화되고 사회심리적 불안은 깊어가지만, 그 불안을 군사과학주의에 대한 더 깊은 의존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1991년 걸프전에서 사용된 전체 폭탄 중 정밀유도폭탄의 비율은 5퍼센트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중반 위성체계의 증강과 비행중 코스변경이 가능한 첨단폭탄 등 군사기술 향상에 힘입어,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그 비율은 95퍼센트로 상승했다고 한다.<sup>48)</sup> 미국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든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은 이같은 군사과학주의에 대한 신봉에 기초하고 있다.

냉전해체의 원인을 ‘힘의 승리’에서 찾은 탈냉전시대 미국인들의 세계인식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사회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일방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력의 정권장악을 계기로 21세기 미국외교에서 세계를 적과 동지, 친미와 반미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그에 바탕한 대외정책을 자본집약적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군사과학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sup>49)</sup>

48) Jennifer Barrett, "Iraq War: Admiral Stephen H. Baker, Q & A,"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March 19, 2003, www.cdi.org.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뉴욕타임즈」는 1991년 페르시아만전쟁에서 정밀유도무기의 비율은 9퍼센트였고, 이번 이라크전쟁에서의 비율은 68퍼센트였다고 평가했다. 15,000개의 유도탄과 750개의 크루즈미사일이 사용된 반면 일반폭탄(unguided bombs)은 7,500개였다.(John H. Cushman, Jr. and Thom Shanker, "War in Iraq Provides Model of New Way of Doing Battle," The New York Times, April 10, 2003.

49) 부시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미연방예산 신청액은 2조2천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국방예산은 3,991억달러이다. 국방부예산 3799억달러와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핵무기관련예산 193억달러를 합한 것이다. 이 중에서 무기개발 및 무기체계 구입비용은 1350억달러에 달하며, 그 대부분은 신무기 개발과 구입에 쓰인다. 그 중 100억달러는 미사일방어망 관련 예산이다. 반면에 빈민층 주택건설 등을 지휘하는 주택/도시개발부와 환경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축소되어 있다. Christopher Hellman, "The Pentagon Budget: More of the Same, Much, Much, More," March 13, 2003,



그와 비례해서 미국 하층민들의 삶은 열악해지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복지정책인 쉘먼 첨단 무기개발 확대정책의 이면인 미국사회 뒤안에서는 실업과 무주택 빈민층(홈리스)이 증가하고 있다.<sup>50)</sup> 그래서 미국의 시장(市長)들의 모임은 연방정부에 대해 실업과 노숙자에 대한 대책으로 80억달러의 증액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복지예산은 삭감해야 했다. 유진 캐롤(Eugene Carroll) 제독이 "미국 자신과의 군비경쟁"이라고 부른 탈냉전시대 미국의 군비확장노선은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수백억달러의 감세정책과 맞물려 미국 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건설은 결국 1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가 2003년 한 해에만 투입하는 예산과 공격용 아파치헬리콥터 개발구입 예산을 합하면 80억달러가 된다.<sup>51)</sup> 미국의 정치와 사회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다. 이같은 인류자원 배분구조의 정치적 왜곡은 부시행정부의 군사패권주의의 주도아래 전지구적으로 파급되기 쉽게 된다.

9/11사태는 공화당의 전통적 외교노선에 내포된 일방주의의 극단적 강화를 수반했다. 부시대통령과 그를 보좌하고 있는 대부분 군부경력(軍部經歷)의 주요참모들의 이념이 출범초부터 예외적일 정도로 강한 일방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었다. 여기에 9/11사태가 그 이데올로기를 구현해낼

www.presentdanger.org. 참고로 2001년도 러시아의 군사예산은 650억달러, 중국은 470억달러, 한국은 141억달러, 북한은 21억달러 수준이다.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Last of the Big Time Spenders: U.S. Military Budget Still the World's Largest, and Growing," Updated March 19, 2003.

부시정권의 국방부가 기획하고 있는 계획대로 국방예산증대가 계속된다면 5년후인 2009년도 미 국방예산은 지금보다 32퍼센트 증가한 5,027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US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2004 Department of Defense Budget Release," February 3, 2003.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03년 6월 분석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도 미국의 군사비지출은 전세계 군사비지출의 43퍼센트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의 군사비지출 증가액은 세계 전체 증가분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2002년도 세계 전체의 군사비지출은 7940억달러였는데, 이는 냉전종식 이후 가장 적었던 1998년에 비해 14퍼센트 증가한 것이고, 1년전에 비해서는 6퍼센트 증가한 것이었다. 이 연구소 역시 미군의 체제개편으로 앞으로도 몇 년동안 미국의 군사비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 2003년 6월 18일.

50) 미국의 군수산업은 특히 부시행정부에 들어서서 최고권력집단과 더욱 긴밀한 인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부시대통령 자신의 집안이 우선 그렇다. 미국 군수회사의 하나인 United Defense Industries는 미 육군과 다섯 번째 큰 규모의 군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글지의 군수산업체이다. 이 회사는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이라는 투자회사(investment firm)에 속한다. 이 칼라일그룹이 부시가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아버지 부시(Daddy Bush)는 칼라일그룹의 원로고문이다. 아버지 부시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한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는 칼라일그룹의 최고경영진의 한 사람이다. 주지하다시피 베이커는 2000년 대선 플로리다 재검표 당시 부시를 위한 법률지원팀의 수장이었다. 그리고 칼라일그룹의 회장은 레이건정권과 아버지 부시정권때 국방장관을 한 프랭크 칼루치(Frank Carlucci)이다. 그는 또한 현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의 절친한 친구이다. David Corn, "Crusader: Intrigue and Backstabbing In the House of Bush," The Nation, May 6, 2003. 칼라일그룹에 관한 또다른 보도는 Alison Leigh Cowan, "Carlyle's Power Web on the Potomac," The New York Times, April 13, 2003. 칼라일그룹을 다룬 책도 소개되고 있다. Dan Briody, The Iron Triangle: Inside the Secret World of the Carlyle Group, Wiley, 2003.

「국방정책위원회」(Defense Policy Board)라는 미국 주요 국방문제를 자문하는 기구로서 그 위원들은 미 국방장관이 임명한다. 현 부시행정부에서 특히 중요한 막후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처드 펠(Richard Perle)이다. 그는 동시에 워싱턴에 본부를 둔 「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라는 보수적인 민간정책감시단체(a private watchdog group)의 회장이었다. 이 단체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의 9명이 2001-2002년 사이에만 총 760억달러 이상의 군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에 관여하고 있다. 리처드 펠은 2003년 3월에 그러한 이해관계에 논란 때문에 회장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그 단체의 위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Bob Herbert, "Spoils of War," The New York Times, April 10, 2003.

또 현재의 백악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극우 단체인 「이라크해방위원회」(Committee for the Liberation of Iraq)의 자문위원회의 의장으로 있는 사람은 과거 레이건행정부때 국무장관을 한 조지 슈츠(George Schultz)이다. 그는 미국 최대의 건설기업인 벡텔그룹(Bechtel Group)의 이사이며, 벡텔그룹은 이라크재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역시 「이라크해방위원회」의 위원이며, 그는 동시에 국내안보장비(domestic security) 업체들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을 하는 팰라딘회사인 Paladin Capital Group의 핵심 경영자이다. Bob Herbert, "Spoils of War," The New York Times, April 10, 2003.

부통령 딕 체니 역시 그러한 코넥션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라크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 국방부 「육군기술단」(Army Corps of Engineers)은 헬리버튼(Halliburton)의 자회사인 KBR(Kellogg Brown & Root)에 70억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주었다. 헬리버튼의 회장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현재 부통령 딕 체니였다. The New York Times, "The Iraq Money Free," April 14, 2003.

51)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www.afsc.org).



수 있는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제공해준 절호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대체 왜 9/11 사태가 일어나서 미국안보를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냈던 수천의 미국시민들이 테러집단의 원시적인 동반 자살무기에 어이없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미국 권력집단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적 성찰은 미국의 권력집단에게서나 일반대중과 언론에서나 찾기 힘든 상황이다.

## 6. 맺는 말

세계자본주의질서는 지난 한세기에 걸친 “투쟁과 승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모순과 불행의 근원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다. 그것이 “역사의 끝”이고, 냉전승리의 사상적 전리품이다. 엄존하는 사회 내적 모순과 긴장은 다시 자연스런 일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서 찾아져야 했다. 그래서 국가간 민족간 차이와 갈등과 대립으로 세계 모순의 본질을 환원시키려 했던, 열강들간에 그리고 중심부 국가 민족과 주변부 국가 민족간의 지배와 폭력으로 얼룩진 19세기 말 20세기 초라는 한 세기 전의 제국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 중요한 가치는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부 국가의 시민권이였다. 이제 다시 문명적 차이라는 개념으로 덧칠된 채로 사실상의 국가와 민족을 경계로 한 또 하나의 집단주의 질서의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인들은 ‘제국’의 정치지도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희생들을 감내하고 있다. 자신들의 개인적 자유를 일정하게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으며,<sup>52)</sup> 그들의 기반적인 언행을 알면서도 속아주고 있다.<sup>53)</sup> 미국의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큰 정부이나 작은정부이나 등의 논란이라든지 개인 자유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한 논의들—를 강조한다. 시민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를 갖고 있지 않다. 보수주의는 더욱 그러하고 리버럴들의 미약한 사회적 비전도 그나마 소진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요구는 ‘제국’의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념적 지평에서 사회의 진보를 향한 지적 에너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대외적인 것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같은 미국 국가의 대외적 역할의 개념이 미국 보수우익의 정치지도부의 주관아래 군사주의적 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도 세계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탈냉전 이후 제3세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국가’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와 더한층의 진보, 그리고 인류사회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갈증을 키워가고 있다. 냉전종식이 미국의 권력집단들에게 역사의 끝을 의미했다면, 냉전체제의 질식상태에서 벗어난 세계의 많은 사회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출발, 역사의 시작을 의미했다. 또한 그 냉전종식으로 인해 동서를 넘어 통합되기에 이른 국제사회는 보편주의의 새로운 활력을 수혈받았다. 비록 제한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제 보편주의적 프로젝트들은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의 지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패권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온 징후들이 많다. 국제형사재판소,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대인지뢰협정, 기후협약, 그리고 특히 남반구 전반에서 광범하게 진행되어온 비핵지대 건설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의 내면적인 붕괴와 침식을

52) 9/11사태 직후 서둘러 입법된 미국의 ‘애국가법’은 “국내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범죄유형을 창조했다. 미국 국내단체들이 테러조직으로 규정될 수 있게 된 것도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구조작전(Operation Rescue)이라든가 환경해방전선(Environmental Liberation Front) 또는 그린피스(Greenpeace) 같은 미국내 환경시민단체들도 이 법에 따르면 테러조직이 될 수 있다. “인간생명에 위협한 활동을 내포하는 동”(conduct that involves acts dangerous to human life)은 모두 테러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한 항의자들(protectors)로 둔갑되는 것이다. 이 조직들을 회원비 지급 등으로 돕는 사람은 언제라도 전화도청을 당할 수 있으며 기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Patriot Act Boosts Government Powers While Cutting Back on Traditional Check ACLU Legislative Analysis, November 1, 2001.

53) 이라크전쟁이후 실시된 여러 미국내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대량살상무기개발 때문에 이라크를 침략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70퍼센트 이상의 미국인들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뜻한다. 그에 대한 미국내 특히 보수우익 정치세력의 반동이 깊어질 수 있다.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자신들의 진취적 역할에 대해 미국인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를 미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범주들로 경계짓는 마니케안 비전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의 공백을 대신해 메꾸어버릴 수 있다. 미국이 자신의 군사패권주의를 스스로 통제할 내면적인 정치적 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할 때, 국제사회의 평화와 진보를 추동하는 힘은 불가피하게 바깥세계에서만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 안보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혁범 (대전대, 정치학)

### 1. 특정한 '안보관'의 보편성

지난 6년간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의 특수대학원 군사안보학과 석사과정 프로그램 때문에 군부대에서 출장 강의를 해왔다. 그 덕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은 군부대안 혹은 근처의 부속 건물에서 군 장교들에게 국제정치 및 북한정치에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쳐야 했다. 젊은 시절 사병이었던 기억, 군 병영에서 겪은 참혹한 경험 때문에 처음에는 군부대안으로 들어가서 대위에서 대령 급에 이르는 장교를 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평화나 인권을 기초로 하는 내 국제정치학, 정치학계 내에서도 주변부에 속하는 내 이론적 입장이 어떻게 안보와 진생을 축으로 하는 군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매 수업시간마다 약간의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학생이며 동시에 군장교인 이들을 어떤 페다고지에 입각해서 가르쳐야 하나 하는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처음에 조심스럽게 문제에 접하던 나는 점점 '민주화 시대에 열린 공간'이라는 점을 믿고 전혀 낮은 각도에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의를 했다. 『20세기의 야만과 문명』 『전쟁의 기억』 『전쟁과 인간』 같은 매우 진보적이고 논쟁적인 책을 텍스트로 사용하고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70,80년대를 생각하면 기적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군 장교들은 소박하고, 덜 오염되었고, 공적이었으며 열려 있었다. 열렬과 '극우장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극소수였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위관급 장교들은 국가, 민족, 전쟁, 적의 개념에 대해 혼란을 느끼거나 내 문제 제기에 대해 골똥히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전반적으로 내 문제 제기는 그저 수업용 이론에 그치고 말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현역 군인이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교수에 대해 예의를 갖추 수 밖에 없는 군 장교들이었지만 '북한' '안보' '전쟁' '국방' 등의 논쟁적인 문제에 접하면 군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다. 물론 그들은 최근 시청 앞에 자주 출몰하는 극우 '애국' 세력에 비하면 훨씬 유연하고 합리적이었다. '주석 개념'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노다 마사야키의 『전쟁과 인간』을 읽고 나서 일어난 논쟁에서 상관의 반인도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애국 장교도 여럿 있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군 장교들의 의식도 점점 열리고 있었다.

어느 날 부대에 일찍 도착하여 장교전용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대학교의 학생식당과 별반 없는 크고 썰렁한 공간에서 밥을 먹다가 벽 선반에 걸려있는 현관을 보았다.

### 평화를 원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라

그 순간 밥을 위에 넣지 못하고 멍하니 그 구호를 한참 바라봤다. 내 어떤 문제 제기도 이 구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모든 군인들의 기본적 사상이 아닐까?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군인들의 운명이고 그렇다고 전쟁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이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평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전제한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들에게 위험천만한 일, 어린아이들의 몽상 같은 것



이다.

내게는 학생이며 일반사회에서 접하는 그 연령의 민간인에 비하여 덜 오염된 군 장교들, 하지만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며 평범한 가정을 일궈나가고 있는 그들을 내 국제정치에 대한 생각에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은 항상 군부대 강의 내내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애매하게 남아있는 과제다.

군대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군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국가안보관'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 되고 이성적인 논의의 틀 속에 수렴될 수 있다해도 기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군인들이 사라지고 군과 정치의 분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국사회에서 군인들이 갖고 있는 안보관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안보관'이라 불리는 특정한 안보 담론이 일반사회에서도 지배적 위치에 있는 데 있다. 가령 대학 새내기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일학년 교양과목에서도 해마다 이러한 담론을 항상 쉽게 접한다. 전혀 국제정치학이론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국가안보' 중심적 현실주의(realism) 국제정치이론 패러다임, 사상적 체계에 익숙해져있다. 그 패러다임에 젖어있는 대다수 신입생에게도 평화는 뭔가 불안하고 비현실적이고 전쟁 준비, 즉 안보 강화는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일이다. 심지어 국가간 전쟁은 인류문명사에서 불가피하고 때로는 진보의 동력이라는 생각까지 하는 학생들도 꽤 있다.

이데올로기에 대해 배울 때까지 대학생들은 이미 그들이 특정한 안보관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이 매우 협소한 이데올로기 교육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의식체계는 국제정치, 남북한관계를 둘러싼 안보와 평화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방해한다. 그것은 국제적 긴장, 남북한 관계의 갈등시에 '우리 안의 대결주의'를 충동하며 물리적 공격의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경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미시권력이 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고 다중적인 주체로 사고 실천하는 것에 끊임없이 제동을 건다.

## 2. 안보 담론의 체계모니와 이데올로기적 토대

한국사회에서 '안보'는 '국익'과 더불어 모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논쟁을 중단시키는 초월적 개념 혹은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굳건한 안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면 어떤 정파나 개인도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반공주의가 쇠퇴한 민주화이후의 시기에도 '안보'는 여전히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어김없이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안보가 초월적인 가치이며 국가의 담당자들이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진제와 관련된다.

안보는 상비군과 더불어 모든 근대의 국민국가를 뒷받침하는 기본 개념이다. 특히 국민국가의 배타적 영토 점유권이라는 개념 위에 바로 안보가 위치해있다. 따라서 안보에 대한 호소가 유독 한국에서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보가 무소불위의 권력 담론이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금기시되며(금기시 되었다는 문제 의식조차 부재하다) 사람들의 일상적 공적 의식에 보편적으로 스며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나는 그게 크게 보아 국가주의, 분단으로 인한 반공반북주의, 과도한 국민의식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

최근에 와서 대안적 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왜 안보는 국가 안보를 자동적으로 의미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 개인 안보, 인간 안보 혹은 마을 안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고 아래 구호에서처럼 안보는 국가와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되는 것일까?

#### 잊어버린 안보의식 다시 찾는 나라사랑

국가주의적 배경 속에서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 국가라는 초월적 실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개체적 수단으로 인식된다. 개인이 국가에 맞설 권리, 국가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국가를 구성원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적 장치로 보는 가치체계가 결여된 것은 한국 국가의 후발국 기원과 오랜 개발 독재적 성격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안전과 별다른 구분 없는 안보라는 개념은 국가만의 독점적 안전 문제로 전환되어 있다. security라는 서양어가 일상생활의 여러 차원에서 그대로 쓰이는데 비해서 한국에서 안보는 당연히 국가의 안보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적 구별을 통해서 개인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혹은 그것들 위에 초월적으로 군림하는 (국가) '안보'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이미 개인이나 지역공동체, 소집단의 security를 넘어서는 특수하고 동시에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national security의 번역어는 '국민 안보'가 적절하다. 국가안보는 state security의 번역어로 더 적절하다).

국가주의는 일종의 국가 중심적 사고다. 한 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이며 개인 삶의 의의를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찾는 이념체계다. 근대국가 체제에 있어서 국가는 항상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독점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다른 영역에 대한 우위를 점했다. 근대국가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성향을 갖는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국가의 형성은 시민혁명 과정에서 대체로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주주의의 확대는 국가권력의 직접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영역을 넓혀나가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서구에서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적 결사체이며 자발적인 개인주권의 양도를 통해 형성된 기구이어야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 되었다. 근대는 국가형성과 근대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출현을 포괄했다.<sup>1)</sup>

물론 모든 근대국민국가는 외부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할 있는 자주적 능력을 주권의 중요 요소로 전제한다.

하지만 후발국 혹은 식민지를 경험한 후발국의 국가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민 혁명적 가치의 확산 없이 발생하였으며 근대적 주체로서의 개인 없이 발전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초국가주의적 식민지통치의 경험, 분단, 개발독재는 국가를 사회나 개인, 사적 집단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실체로 각인 시켰고 '안보'는 당연히 '국가안보'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번영(경제)과 더불어 국가 및 그것에 귀속된 '국민'들이 의문의 여지없이 자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방식이 얼마나 질기도록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주요 일간지 정치사회면을 대충 훑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1) 국가주의에 관한 부분은 줄고 "우리 안의 국가주의-국가주의 문화와 인권,"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2』에서 옮겨왔다.



있다. 가령 11만 여명이 참가했다는 최근의 '6.25 국민대회'에 대한 논설에서 한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다.

6.25 국민대회에 참석한 11만 여명은 어느 이익단체처럼 '내 몫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나라의 안보'와 '경제의 안정'이었다. 2)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관념이 비당파적 초월적이라는 신념 같은 것이다. 그것은 '몫'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보 없이 국가 없다'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구호는 안보의 절대적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기본 의무가 안보임을 명백히 한다. 안보 담론을 통해서 국가주의는 강화되고 정당화된다. 또 국가주의가 강화되면 될수록 안보주의도 강해진다. 국가가 초월적인 존재인 만큼 안보도 그렇다. 따라서 바로 그만큼 '국가 안보'에 대한 무시나 소홀함은 이들에게는 열정적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폭발력적 반응의 이유는 그것이 초월적 영역의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누구에게나' 절대적 선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개혁적 매체에서도 이점은 유사하다. '국가 안보'가 철저히 당파적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의 구체적인 언어작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적 파장이 계급적, 성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1997년 이후 경제 위기가 전면화되면서 나타난 구호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산다"는 식의 구호는 한국사회의 모든 지배적 담론을 어떻게 해서든 '안보'의 강화에 연결시키려는 국가주의적 노력의 일환이며 동시에 안보나 경제를 초정치적 초당파적인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것의 차별적 성격을 무화시키려는 무의식적 의식적 발상이기도 하다.

대중언론 매체에서 국가 안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것과 자유 혹은 개인과의 복잡한 관계가 무엇인지는 따져보는 관점은 희귀하다. '국방의 의무'와 그것에 기초한 국가안보는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KBS에서 한겨레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에서 대한매일까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견디며 오늘도 최전선 초소에서 우리의 씩씩한 장병들은 국토방위를 위해 군복무에 헌신하고 있다," "유사시에 초개같이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군무하고 있습니다! 충성!" 하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보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가령 국방관련 행사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해서 터지고 제트기가 연기를 뿜으려 날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보도에서 기자들의 설명은 한결 같이 "철통같은 안보태세"고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이다.

2) 한국의 국가안보 담론이 다른 후후발국과도 다르고 또한 강력한 것은 그것이 민족내부의 적을 전제로 하는 '분단'적 사고와 현실, 그것이 세계적 차원의 냉전과 결부되어서 발생한 반공반북주의 이데올로기와 겹쳐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단체제에서 과대 성장한 안보관련 군사적 집단, 군산과학 복합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어떤 유명한 역사가가가 지적하듯 제1차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총성이 멎고 포탄이 터지지 않을 때에도 세계대전이라는 관점에서 생활하고 생각해"왔다면<sup>3)</sup> 국가 안보에 대한 고정관념은 단순히 분단국

2) 『조선일보』 2003년 6월 25일자 논설.

3) 데이비드 헬드 외, 위음,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비평사, 2003), 143면에서 재인용.



가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다).

코리아 반도의 분단체제는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안보에 절대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안보지상주의적 가치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안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의 존재는 어떠한 비판과 도전으로부터 스스로를 면제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개인과 집단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는 성역화된 실체로 인식되었으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법체포와 고문을 포함한 어떠한 희생도 정당화할 수 있는 초역사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따라서 반공주의를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것은 안보의 신성성과 절대 불가침성이다. 사실 한편으로는 반공주의는 안티테제인만큼 궁극적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반공을 하는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과거의 한국에서의 국가는 그것을 두 가지 축, 즉 안보와 경제 발전에 두었다. 동시에 안보나 경제발전의 정당한 근거도 반공주의로부터 일정 부분 빌려오는 상호의존 관계가 존재한다. 김대중정부의 남북한 화해협력 정책의 강화이후 반공 담론의 위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말한다.

화해와 협력은 튼튼한 안보 속에  
확고한 안보의식 평화통일 앞당긴다  
안보로 뭉친 정신 세계화 앞당긴다.

심지어 세계화나 남북한 화해협력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안보의 주체들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구호들을 통해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안보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명백히 요구한다. <평화로울 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고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sup>4)</sup> 지배적 안보 담론은 여전히 그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비슷한 발상이 엿보인다.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일의식과 안보의식간의 균형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통일국가의 실현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 하는 안보 의식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대남 적화를 위한 기본 노선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두 가지 의식간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다.<sup>5)</sup>

균형을 강조하고 있지만 통일 담론 속에서 행어나 국가안보의 최우선이 약화되지 않도록 애써 안보의식을 강조하는 관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안보가 흔들리면 평화도 통일도 없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지회)"라는 발상과 통일신상에 놓여있다.

흔들리는 안보정신 경제불안 사회불안  
빈틈없는 대공태세 안정 속에 국가발전  
국가발전 가로막는 용공책동 분쇄하자  
국가안보에도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나라 위한 신고 정신 다져지는 국가안보

111.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국가정보원 명의의 서울지하철 4호선 홍보물.

5) 교육부/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윤리』 (대한교과서, 1997), 44-45면.



너와 나의 방심 속에 무너지는 국가안보  
호트러진 안보의식 파고드는 좌익세력  
북한인식 똑바로 안보의식 새롭게

이런 구호는 반공적 안보태세가 안정의 밑거름이고 그게 '국가발전' 및 경제의 조건, 심지어 평화와 통일의 토대라는 점을 전달한다. 역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용공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안보 의식이 해이해지거나 호트러지면 모든 번영과 안정, 그리고 국가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가 여기에 깔려있다. 특히 마지막 네 가지 구호는 개인들의 반공적 경계태세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반공담론에 관한 내 기존 연구에서 확인 한 것은 대부분의 반공주의 표어들이 안보나 경제 발전을 자기정당화의 전제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sup>6)</sup> 그것들은 서로 의지하면 일종의 자동적 순환고리를 만들어내고 유지한다. 반공이 안보를 받쳐주고 안보가 발전을 받쳐주며 동시에 경제발전 및 안보가 반공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조다. 하지만 과연 안보는 경제와 반공과 친화적인 개념인가?

3) 안보주의 담론에서 보이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배타적 타자의 존재다. 안보는 가상의 적, 잠재적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근대국민국가체제에서 그것은 항상 다른 nation으로부터 '우리' nation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 담론은 국민 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후자의 강화는 전자를 부추기는데 기여하게 된다. 즉 nation(민족, 국민)의식의 강화는 '우리'와 다른 타민족 및 국민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러한 타자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은 '우리'의 보위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nation을 강조할수록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안보주의는 정당성을 얻으며 강화된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 분단체제 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근대 국가보다도 국민의식이 강한 사회적 공간이 되어 버렸다. 동질적인 ethnicity를 공유하는 다른 nation, 분명하게 적대적인 nation(즉, 북한)의 존재나 동북아국제정치공간이 갖고 있는 매우 긴장적 성격은 더욱 이러한 의식을 과도하게 분출시켰다.

나는 몇 년 전에 쓴 글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다시 읽어본다.

'우리'는 반드시 '남'을 필요로 한다. '남' 없이 '우리'는 규정될 수 없다. '국민'이 타자의 배제 속에서 태어나는 개념이라는 것은 많은 지식인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 '비국민'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국민'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비국민'은 우리 사회에서 무슨 뜻을 가질까? 북한인, 메국노, 반역자, 반민족분자, 외국인은 '비국민'에 속한다. (해외거주 동포는 '비국민'이지만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민'은 항상 '비국민'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타자화하게 된다. 이런 의미화 과정 속에서 '우리'와 '남'은 이분법적으로 갈라지고 '우리'는 동질화된 집단으로 인식된다. 또 '남'은 유사시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희생될 수도 없는 타자가 된다. '우리가 남인가?'하는 지역주의적 표현을 확대하면 '남'에 대한 배타적 차별의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민'을 길러내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와 '남'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즉 '문화적 식별' 능력을 갖게 된다. 화교, 조선족 및 필리핀 등지의 제3세계 출신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심지어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 의식은 이러한 '국민'문화의 결과다. 그리고 유사시에 '비국민' '비민족'은 근대적 제노사이드의 대상이

6) 줄고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1998, 연세대통일연구원) 참조.



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은 '반공국민'이었고 따라서 '빨갱이'는 '국민'자격을 상실한 존재이며 '인간 이하'로 간주되었다.<sup>7)</sup> 언제든지 합법적 비합법적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근대 국민적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비국민' '타국민'에 대한 전쟁 (즉 타자에 대한 집단학살)에 항상 대비하기 위한 문화적 훈련의 일부이기 때문이다.<sup>8)</sup>

안보가 국가 안보로 성립되는 건 '타자'에 대한 배타적 설정과 더불어 '개개인을 과거와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맺게 하는 메커니즘'에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어떤 개인은 '개인사'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국가, 민족, 인종의 역사를 갖게 되고 그게 자기 역사가 되게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이 곧 나의 과거며 전통이며 운명이라고 믿게 만드는 '국민' '민족' 교육은 사실상 안보 논리의 근본적 기초다.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과거는 곧 '나'의 과거가 되고, '나'는 그 과거에 대해 책임감, 죄책감, 수치심, 프라이드 등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국가 안보의 신화는 탄생한다. 따라서 '국민' '우리' 의식은 사실은 잠재적인 전쟁에 대비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그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안보주의 담론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 3. 안보 및 '힘' 담론과 평화

로스(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기지 내 박물관 관리원)에게 말했다. "강대국엔 포츠머스의 이미지는 평화지만, 한국은 비참한 운명의 시작이다. 그는 "제국주의 시대의 비극"이라고 답했다. 평화를 지킬 힘과 능력이 없는 국민은 평화를 맛볼 자격이 없다. 구걸하는 평화는 썩고, 국론은 갈리고 평화를 잃는다. 평화의 속성은 포츠머스 회담 때나 마찬가지다.<sup>9)</sup>

2003년 어떤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포츠머스를 둘러보고 쓴 이 글은 많은 한국의 지식엘리트들이 공유하는 애국적 현실주의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이 지식인의 평화에 대한 생각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군인들의 생각과 한치의 오차도 없다.

가령 정전회담 증인 유재홍 전 국방장관에 대한 기사 제목은 "전쟁은 영화 아닌 엄연한 현실 확고한 안보관으로 북을 봐야"며 끝머리는 "지금이야말로 젊은 세대들이 정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때입니다"라는 그의 발언 인용으로 끝난다.<sup>10)</sup> 이런 식의 기사는 6월이나 7월 혹은 국방 관련 기사에서 보편적이다.

항상 지배적 안보 담론에서 '힘'은 긍정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평화는 믿을 수 없는 불안감을 암시한다. 따라서 불안한 평화는 힘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을 한국형 안보주의라 부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나, 현실주의자야말로 국제정치현실이 약육강식의 정글이며 참으로 냉혹하다는

- 7) 김동춘, "20세기 한국에서의 '국민,'" 『창작과 비평』 1999년 겨울호 (통권 106호), 36-38면.
- 8) 줄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국민적 정체성의 문화를 넘어서," 『스모그』 2001년 창간호.
- 9) 박보균, "중앙포럼: 포츠머스 조약을 찾아서," 『중앙일보』 2003년 7월 3일자.
- 10) 『동아일보』 2003년 7월 24일자 기사.



걸 잘 알고 있다. 전쟁은 영화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자들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naive) 이상주의자다. 후자는 대체로 평화운동가, 학자, 여성, '요즘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2>. 국제정치현실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힘, 특히 군사력이나 전쟁준비태세가 가장 중요하다. 힘없는 평화는 위험하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만 평화를 외치다가는 결국 당하고 만다.<sup>11)</sup>

<3>. 국익을 우선시하고 만약의 도발에 대비하는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적 체계 하에서 일종의 조건 반사적 회로가 생긴다.

a 회로:

국제정치현실->냉혹한 정글->약육강식->자구적 힘의 필요성->국력증강 및 국익 강화<->안보태세강화<->국가 강화

b 회로:

평화->이상주의->무방비->불안->도발 가능성->유비무환

이러한 안보주의 조건반사 회로를 통해서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대안적 비판적 인식, 국익 국력 국가 등을 매개로 하지 않는 안보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과연 국제정치현실은 정글인가? 약자는 아무런 발언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약자가 생존하는 것은 오로지 힘을 키울 때뿐인가? 국력이나 국익이라는 개념이 진정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우리'와 '적'은 정말 이해관계가 갈리는 두 개의 이질적 집단인가? 안보태세 강화 보다는 평화를 강력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가의 물리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국제적 협력이 대안은 될 수 없을까?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은 묻혀버린다. 오로지 힘의 증강을 통한 국가안보의 강화만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으며 유발하는 정치사회적 영향과 암시에 대한 생각도 묻혀버린다. 이러한 안보 담론의 종착역, 정치사회적 암시는 무엇일까?

1)

현재 지배적인 안보 담론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국가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와 군사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국가 및 안보는 정치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 결과 갈등, 다양성, 비판적 논의를 축으로 하는 정치는 그 만큼 위축된다.

11) 항상 이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되는 것은 빈헨협정을 체결했던 영국 수상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이다. 최근에도 한 언론 엘리트도 이점에 착안하여 평화논리의 위험을 강조한다. "국민적 영웅이 되어 돌아온 체임벌린은 '영광스러운 평화'를 역설했지만 이듬해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유럽 전역은 제2차세계 대전에 빠져들고 말았다. 체임벌린의 오판이 초래한 엄청난 재난을 수습한 것은 빈헨협정에 반대했던 처칠이었다. 평화는 순수한 열정이나 유화정책으로 이룩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이다." (이선민, "조선데스크: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조선일보』 2003년 8월 19일자). 하지만 상황판단에서의 오류를 유화정책 자체의 문제로 이끌어 가는 것은 부리한 논리다. 다른 상황에서는 유화정책이 적절하고 강경책이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의 문제가 정치의 장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 헤게모니적 입장을 점유하는 특정 집단(일반 시민들의 의식에 인식되지 않는)의 이해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기 마련이다. 특정한 계급, 성,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안보 논리가 보편적인 것으로 잘 못 인식되면서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최대화된다. 이

가령, 평화와 전쟁에 대해 한 학기 배우며 비판적인 의식을 높이고 학기말에 입대한 제자조차 이런 편지를 남겼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나라 잘 지키고 올 테니 두 다리 쪽 펴고 주무십시오  
교수님도 꼭 쉬세요.. 제가 무슨 일 생기면 총 들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sup>12)</sup>

꽤 의식이 있었던 이 학생의 생각에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별로 없다. 배웠던 여러 가지 비판적 이론과 나라 지키는 일을 연관시키는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교수님을 포함한 민간인을 돕는 일로 자연스럽게 전제되고 있다. 안보라는 개념이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론을 넘어선 초월적인 것으로 이미 침투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과정에서 가령 안보의 주체인 남성의 가부장성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나이'니까!"), 국민주의(병역의무를 다한자만이 '국민'의 자격이 있으니까), 집단주의("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나라가 산다")등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2)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유사시에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안보라는 초월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위해 기본적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기본 인권이 유보, 제약될 수도 있다는 관념은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sup>13)</sup>, 국가보안법에서 첨예하게 드러나듯, 항상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국가에 관련된 중요한 과업, 혹은 '국익'을 위해 개인이나 기본적 인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담론은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한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표현과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절대적 보호 같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국가 안보'를 축으로 하는 사유방식과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3)

여기서 사실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안보 담론에서 모든 상황은 이미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시민들에게는 '따라야 할 의무들'만 있는 상태로 그들을 조직화 해버리는 경향이다. 따라서 안보 논리의 내용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국가주의적 조합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인간유형은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정치사회적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대응 실천하게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12) 2002년 제2학기 제3세계정치론을 들었던 P군이 방명록에 남긴 글.

13. 『대한민국 헌법』(1987년 개정) 제 37조에서 인용.



4)

하지만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점 1) 2)는 도전 받고 있다. 안보 담론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으면서 여전히 유포되고 있는 생각은 앞서 얘기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식의 논리다. 힘의 담론은 2003년 오늘도 강력하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는가? 힘의 논리는 언제든 시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군축, 화해, 협상 등의 비군사적 접근의 공간을 위축할 수 있다. 힘의 담론이 강할수록 타협과 외교의 폭은 줄어든다. 동시에 안보담론은 '국민국가'라는 단위를 기초로 하는 배타적 사유방식을 자연스레 강화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유대, 초국민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눈을 가려버린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에 의해서 생겨나는 '힘'이 사실은 전쟁을 유발하고 국가의 안전을 훼손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안보 딜레마'라고 불리는 현상은 바로 이점에 주목한다.<sup>14)</sup>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비증강이 상대방의 잇따른 군비증강으로 인해 되려 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되려 안보의 기반을 훼손하고 결국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안보 담론은 항상 반안보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4. 남은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한 국가안에서 통일된) 문명화된 국민이라면 그런 타락한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기를 희망한다고, 그것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에 반하여, 각 국가는 국가의 존엄을 (국민의 존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법적인 강제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두고 있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통치권이 갖는 위력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에도 희생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가에 필요치 않는 한에서 국가를 최소한의 위협에도 빠지들지 않게 한다.<sup>15)</sup>

여기서 안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학의 케케묵은 논쟁,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조주의간의 차이와 갈등을 소개하고 조명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안보와 평화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한계, 즉 근대적 국민국가의 틀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주요 관심은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안보담론을 어떻게 바라보며, 평화지향적인 흐름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체,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을 특정 '국가'로 전환시키고 유지하는 담론과 정치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앞서 얘기한 것에 어느 정도의 결론이 들어 있다. 즉 국가주의, 반공주의, nation 의식 그리고 힘의 논리와 중첩되고 일컫어있는 안보 의식을 개인과 구체적인 생활 공동체의 실제적 안전과 행복에 관련지어서 해체해나가려는 움직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사실 개인 및 마을 지역 공동체의 안전이란 되려 '국가안보'에 의해 훼손

14) Barry Buzan, *People, States, Fear*, (Brighton: Harvester, 1991); 조지프 나이,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이론과 역사』, (한울, 2000) 34-35면 참조.

15) 임마누엘 칸트, 이한규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시광사, 1992), 제2장 31면.



되거나 파괴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의 발언은 바로 국가가 갖는 강제적 통치권이 개개 시민들의 안전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오늘날 국민국가nation-state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적 안전 역시 국가 안보 논리가 제시하는 제도 및 파워에 의해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사실 많은 군사학자들이 지적하듯 이제 사실 “국가안보 담론은 국가행동의 단순화된 표현, 정당화도구에 불과하다.”<sup>16)</sup> 인국가적 차원의 안보는 현대 군사의 지구화과정속에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진 자본국들의 군사적 주권, 자율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방위산업의 토대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초국국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방위’라는 개념을 훼손한다. 차라리 국가 안보보다는 국제 안보라는 말이 현실에 더 적합하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기꺼이 ‘국민’이 되어서 국민국가가 요구하는 전쟁 준비에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national security의 신화할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안보’가 마치 대다수 구성원들의 공통적 운명의 보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제시하는 ‘자주국방론’도 민족주의적 반미정서에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나 코리아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에 대한 현실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안보가 문제가 되는 건, 금그어 놓은 경계, 즉 자신이 소속된 국민국가의 밖의 무언가에 대해서 배타적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평화’와 ‘우리의 평화’는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그 ‘우리’라는 걸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건 국적에 기반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의 복합체다. 여기서 지배적 안보담론의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망이 보일지도 모른다. 경계가 없어진다거나 보편적 윤리에 의한 세계 공동체 같은, 지금으로부터 너무나 광대한 거리에 있는 어떤 이상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보를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딱딱한 토대를 좀 흐물거리게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물론 안보 담론이 갖는 여러 장치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흐물거리게 상태’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걸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다. 국가안보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현재 지구화 globalization와 맞물리며 국민국가가 자신의 경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더 강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완전히 무력해 지는 것도 아니지만, 점점 국민을 안정적인 범주로 만드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둘러싼 담론의 해체작업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축으로 하는 운동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역사’ ‘국민 교육’ 등, 개개인을 특정 집단의 과거와 관계 맺게 하는 담론의 해체를 필요로 한다. 이때 해체는 단지 특정 관점에서 조명된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쓴다는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의 만들어진 ‘특정한’ 기억을 그 시공간과 뚝 떨어진 특정 개인에게 연결시키고 그 개인의 어떤 감성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 관계의 총체적 메커니즘을 해체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과 현실적 강제력을 움직이는 법적, 정치적 경계, 그 ‘우리’의 배타적인 경계가 허물어져서 ‘우리-그들’의 이분법이 해체되어야 안보에 대한 논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책 없는 평화주의

16) 데이비드 헬드 외, 앞의 책, 제2장 조직화된 폭력의 확산, 225면.

17) 같은 책, 215-230면 참조.



'라는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문제 틀로 옮겨질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지배적 안보 언설의 해체와 재구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보담론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는 정치경제 메커니즘, 안보산업을 둘러싼 시장과 국가간의 복합적 관계망도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야 할 것은 잊지 말자.

(끝) kwonhb@dju.ac.kr